

**201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한국 반다문화주의의 현황과 전망

- 일시 : 2012년 5월 25일(금) 12:30~18:40
-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주최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후원 :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신문

2012년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대주제: 한국 반다문화주의의 현황과 전망

사 회: 박영준(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개회사: 이찬욱(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장)

축 사: 오영식(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환영사: 신광영(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부총장)

〈제1주제〉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현상(13:40-15:40)

사회자: 김휘택(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13:40-14:20)

발표자: 조민식(서울원격평생교육원 경영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자: 이지훈(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찬옥(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2.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14:20-15:00)

발표자: 조동환(외국인범죄척결연대 대표)

토론자: 강진구(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김점영(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사무총장)

3.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과 이주자 문제(15:00-15:40)

발표자: 아웅 틴 툰(이주민방송(MWTV) 대표)

토론자: 이성복(다문화정책반대 인터넷 카페 전 운영자)

최영진(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휴식〉 (15:40-15:50)

〈제2주제〉 반다문화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15:50-17:50)

사회자: 이춘복(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4. 정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 다문화 현상의 문제점(15:50-16:30)

발표자: 신만섭(대구교육대 강사)

토론자: 남해경(웹진 시대소리 편집장)

유숙란(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교수)

5. 차이와 배제의 공포 -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타자를 중심으로 (16:30-17:10)

발표자: 이명현(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토론자: 김인희(전남대 BK연구교수)

함복희(강원대 강사)

6.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 '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17:10-17:50)

발표자: 박재영(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토론자: 김준혁(경희대 휴머니티스대학 교수)

하원호(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초빙교수)

휴식(17:50-18:00)

〈종합토론〉(18:00-18:40)

좌장: 박경하(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토론: 손준식(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이주리(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원형(중앙대 첨단영상학과 교수), 최성환(중앙대 철학과 교수),

이산호(중앙대 불문학과 교수), 안기수(남서울대 교수)

리셉션(18:40-20:00): 중앙대학교 R&D센터 11층 〈유니버시티 클럽〉

개 회 사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주제 ‘한국 반다문화주의의 현황과 전망’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국민 10명 중 7명은 다문화 사회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와 개방성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 가운데 하나로 이주 외국인에 대한 구성원들의 시선과 입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시선을 하나의 궤로 한 이번 <전국학술대회>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문화>라는 구호 아래 실시된 각종 정책이나 제도가 이주 외국인들을 한국식 단일문화로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을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존중하면서도 <이질적 존재>로 보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주체로 열리는 <2012년 전국학술대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장 **이 찬 욱**

축 사

소통과 공존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되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오영식의원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40여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국내 최초 다문화 관련 중점연구소로서 다문화 관련 의제 개발과 활용 가능한 다문화콘텐츠 개발 등으로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일깨우고 국내 다문화 연구를 선도해온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전국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이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특별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여 오신 이찬욱 단장님을 비롯한 사업단 소속 연구원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신광영 부총장님을 비롯한 중앙대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이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구의 약 3%인 2억 1천만 명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이자 『제국』의 저자이기도 한 네그리와 하트는 “하나의 유령이 세상을 출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라는 유령이다”라며, 이주로 인한 국민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초국적 활동이 일상화된 지구화 시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 역시 김영삼 정부의 개방경제 정책 이후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문화와 인종이 혼재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돌파라는 수사학적 표현은 이주가 일상의 경험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 명이란 통계는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주’와 ‘다문화’가 삶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주 문제(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원리로 정책적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등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문화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눈앞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측면이 강했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다문화관련 법의 미비 때문이겠지만, 최근 들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예산의 증가,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급증,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을 내세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향후 우리 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마저도 어떻게든 정책과 담론의 층위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진행되는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학술대회는 그 어느 학술대회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국사회가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범위와 다문화적 포용의 강도,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소통과 공존이 통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오영식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2012년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각계 각층에서 방문하여 주신 내빈들께 모든 중앙인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이찬욱 단장님과 연구단 성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은 인문학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창의적인 연구 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반다문화주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이 사업단이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시각과 실험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콘텐츠 분야에도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에,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의 많은 연구자들이 학술대회 개최 소식을 듣고, 많은 관심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과 언론에서도 이번 학술대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내언론 『중대신문』에서도 학술대회의 포스터를 홍보차원에서 실어 이번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유도한 바 있습니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봄 날, 이렇게 중앙대학교에 찾아와 주신 연구자들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참여하신 연구자 분들의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부총장 신 광 영

목 차

개 회 사	이찬욱 /	iii
축 사	오영식 /	iv
환 영 사	신광영 /	vi

제1주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	조민식 /	3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조동환 /	25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과 이주자 문제	아웅 톤 톤 /	57

제2주제

정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 다문화현상의 문제점	신만섭 /	71
차이와 배제의 공포 -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타자를 중심으로	이명현 /	95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 '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박재영 /	111

2012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1주제

사회: 김휘택

주제: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현상 (13:40-15:40)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

조민식 (서울원격평생교육원 경영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 안에서 자신의 민족과 나라만을 강조하며 살아 가기 보다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지난 1990년 4,710건으로 전체 결혼의 1%대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이 15년이 지난 2005년에는 4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서는 전체결혼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이 10.8%로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하는 아이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제 한국도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가 될 정도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의 출산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들의 자녀 역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병순, 2007). 그러나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인데 근간에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하게 듣고 있는 ‘코시안¹⁾’의 사회적 차별 및 가족 해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다문화가정 특히 코시안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하여 자라고 있는 이들 자녀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보면 단순히 ‘코시안’이라 불리는 한국인 2세 자녀의 학력 저하 현상이나 이들의 사회적 차별 등에 대한 이슈 중심적이고

1) 1996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이다. 코시안은 보통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2세,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가리키며, 넓게는 코시안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사는 지역까지도 포함한다.

단편적인 보도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구논문들도 대부분 그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와 생활에 대한 관찰의 결과보다는 그들의 보호자와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의 인터뷰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대부분이 아직 어린이라는 점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민속지적 관찰은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관찰과 인터뷰를 시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 자녀 중심의 연구들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듣기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현재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은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시대가 도래 하였다.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출현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아닌 한국가족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만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질적 연구는 앞으로 한국가족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효과적인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가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며 국제결혼가정(한국인 아버지(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어머니(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

정으로 한정한다.

문화의 정의는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문화란 그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정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은 ‘모두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1년 영국의 인류학자 Tylor는 “문화란 사회 구성원으로써 인간이 획득한 지식, 믿음, 예술, 법률, 도덕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Goodenough는 문화를 생물학적인 유전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람들이 학습해야만 하는 대상인 문화는 결과물인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의 특별한 면보다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협의된 지식이라고 하였다(김영찬, 1980; 김미정, 2004).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교통과 통신, 정보의 세계화는 경제를 하나의 시장경제로 세계화했지만, 경제가 세계화되어도 문화는 쉽게 획일화 되지 않는다. 즉 오랜 이민 국가들의 경험으로는, 민족 전통에 따른 문화나 종교, 생활 습관 등은 간단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병순, 2007). 하지만 단일 문화로 간주되던 우리 사회와 학교에도 이제 다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 가정과 이들을 받아들인 사회(host society)와의 사이에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득권 문화에 대한 동화를 강요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타문화 이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사례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의 기존문화에 동화를 요구하는 철저한 동화주의 노선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다문화가정에서의 외국인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 철저한 한국문화교육만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 어느 단체나 교과과정에 다문화가정의 문화와 외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일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속의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자신의 사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한다.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있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과 결혼 이민 가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 가정이 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외국인 노동자간에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있다. 그리고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이주한 가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김병순, 2007).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은 같은 국적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도 있고,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중국인 남편과 필리핀 부인과 같은 경우처럼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각자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에다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를 더해 이중, 삼중문화의 틀 속에 살고 있으므로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제결혼이주 가정은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적 신념으로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이 성사되면서 활성화되었고 이어 결혼 중개업자가 주도하여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와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대상인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의미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한정한다.

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 및 한계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국제결혼 가정들은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이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²⁾개념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있어 왔고, 1990년대 이전까지의 국제결혼은 드문 현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은 이전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박경동의 논문³⁾ 등과 같은 90년대 이후 발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다문

2) 현재 국제결혼가정은 ‘이중문화가정’(dual-culture family), ‘온누리안’, ‘다문화가족’(multi-culture family) 등 다양하게 호명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며 논쟁적인 개념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혼혈인’, ‘코시안’, ‘온누리안’ 등의 용어가 내포한 혈통, 민족, 국적의 차이를 강조하는 효과와 그 차별성을 비판하며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박경동, 2007).

3) 박경동(2007)의 연구에서 말하는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의 특징 세 가지

화가정에 대한 연구들은 2006년 정부의 국정과제회의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및 혼혈인, 이민자의 사회통합지원 방안”의 발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정부의 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로 나오기 시작했으나 이들 보고서의 현실 문제제기는 이주여성을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이었다.

한건수(2006)의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없이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주변 가족들은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문화적 차이를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해 버려 갈등 구조를 양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문화가정 자체는 그 기원부터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의 대상이 가족 모두가 아닌 이주여성 자체로 한정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의 단편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혜순(2006)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나 다문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 다문화주의를 일찍부터 채택한 서구의 문헌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주의를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재가공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구건서(2005)의 연구는 한국사회내의 다문화주의의 강조를 주장하였는데,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가 주창되기 전 인종정책과 관련한 동화주의가 있었고, 문화인류학에서 등장한 문화상대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근대화론에 입각한 동화주의는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집단들에게 그들의 언어 및 생활습관 그리고 문화들을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융합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이론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인데, 이는 대부분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보편적인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양상으로 진행되며 그들을 온정주의적으로 대상화하는 측면이 강하고 문화적응의 교육 대상은 항상 이주여성만을 가리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혜순, 2006).

또한 기타 ‘디아스포라4)’ 관련 연구물들이 나오면서 다문화주의 실천이라는 성찰

① 국제결혼의 양적팽창(2003년 전체 혼인 건수의 11%가 국제결혼).
② 국적의 다양화.
③ 양적 팽창과 더불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함.
4) 디아스포라는 ‘민족분산’ 또는 ‘민족이산’으로 번역이 되는데, 단지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윤인진, 2003).

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대상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자료는 거의 희박한 실정이고 그나마 연구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와 생활에 대한 관찰의 결과보다는 그들의 보호자와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의 인터뷰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저 다문화가정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타자들의 인식에 의해 멋대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초등학생) 10명을 선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선택한 이유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거주 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에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 진행 및 면접자와의 Rapport형성이 용이하도록 2008년부터 (사) 교육과 나눔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10명을 선정했음을 밝힌다.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순번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역
				부	모	
1	이 * 미	여	만 11세	한국	중국	경기도 광주
2	김 * 수	남	만 11세	한국	중국	경기도 광주
3	김 * 기	남	만 12세	한국	필리핀	경기도 광주
4	우 * 강	남	만 12세	한국	중국	경기도 광주
5	김 * 철	남	만 12세	한국	필리핀	경기도 광주
6	김 * 혜	여	만 11세	한국	중국	서울 성북
7	이 * 영	여	만 11세	한국	중국	서울 성북
8	김 * 진	남	만 12세	한국	필리핀	서울 성북
9	이 * 식	남	만 12세	한국	필리핀	서울 노원
10	최 * 현	남	만 11세	한국	중국	서울 노원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름은 가칭이며, 성별은 여자3명, 남자 7명이다.

연령은 2009년 현재 만 나이로 만11세 5명과 만12세 5명이다(초등학교5,6학년).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터뷰 결과, 모두 어머니의 나라에 가본 경험이 있었다.

연구대상 자녀들의 부모는 아버지 쪽은 모두 한국인이고 어머니 쪽은 모두 외국인인데 중국인이 6명, 필리핀인이 4명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사) 교육과 나눔에서 주 2회 학습 멘토를 하는 요일에 실시되었으며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여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는 면접자들의 보다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평소 Rapport형성(관계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IV.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

다문화가정 자녀들과의 심층면접은 앞서 언급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특정 날짜와 면접장소를 정하기보다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복지법인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본 조사의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학급에 골고루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인근 도시와는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고 외부기관 위탁이 아닌 센터 자체에서도 학습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최근 들어 광주시로 이주하는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자: 광주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순(가명) 사회복지사: 최근 들어 광주시로 이주하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주시 소재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멘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취업 등을 이유로 지방에서 거주

하던 다문화가정이 이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와 함께 이들 자녀들의 취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한 학급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끌고루 여러 학급에 일정비율을 정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이 같은 학교의 방침은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익히 알고 있다.

연구자: 너희학교에 엄마가 외국인인 애들이 많이 있니?

김*기: 예. 우리 학교에만 한 50명 정도 있어요.

연구자: *강이 너랑 *기는 같은 반이니? 맨날 같이 다니는 거 같은데..

우*강: 아니요. 바로 옆 반이에요. 저희처럼 다문화가정 애들은 한 반에 한두명씩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일부러 그런데요.

연구자: 그런건 어디서 들었어?

우*강: 그냥 애들도 다 알아요. 담임선생님도 얘기 해 주는데요 뭐.

이렇듯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방침은 그 학교 학생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의 방침에 대해 일반 학생들의 반응과 이들의 교우관계는 어떻게 궁금해 졌다.

연구자: 너네 둘이 제일 친한가봐?

우*강: 예. 바로 옆반이고 해서..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같이 놀아요.

연구자: *강이 너는 같은 반 애들하고는 안 친해?

우*강: 아니요. 친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만 친해요. 수업 끝나면 그냥 *기랑 놀아요.

연구자: 왜?

우*강: 그냥요.. 애들은 학원가고 그러니까..

연구자: 너는 학원 안가?

우*강: 예.

연구자: *기 너도 학원 안가니?

김*기: 예. 근데 전에 다녔다가 끊었어요.

연구자: 왜?

김*기: 그냥 재미없어서요.

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가장 친한 사이는 서로이며 그 밖에 같은 반 친구와도 친하지만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같이 놀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학교 내 교우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았다.

연구자: 혹시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들은 있니?

우*강: 아니요. 근데 *기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연구자: *기야 누가 그렇게 괴롭혀?

김*기: 그냥.. 키 큰 애들이 그러는데 학교 끝나고 막 때렸어요.

연구자: 왜 때린거야?

김*기: 거지라고 놀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우*강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중국인인 관계로 외모적으로 한국 학생과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김*기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필리핀인인 관계로 외모적으로 다른 학생과는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외모적인 조건 때문에 학교 내 괴롭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또 다른 어머니가 필리핀인인 김*철 학생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들 있어?

김*철: 맨날 놀리는 새끼가 있어요. 씨발놈..

연구자: 왜 괴롭히는 거야?

김*철: 이상하게 생겼데요. 엄마 욕도 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애들이 때렸어요.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지역 거주 자녀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 이상하게 생겼데요.

이*식: 껌둥이라고 놀려요.

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다문화가정 특히‘코시안’에 대한 왕따현상은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차이가 없는 중국인 어머니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필리핀과 같은 외모적인 차이가 있는 자녀와의 경우는 교우관계에 있어 외모적 차이에 기인한 따돌림 현상 등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반응

다문화가정 자녀들 스스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떻고 또 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자: *수야 다문화가정이 뭐지 알어?

김*수: 예. 저희들보고 그러잖아요.

연구자: 너보고 다문화가정에서 산다고 그래?

김*수: 예. 학교에서요. 코시안도 알아요.

연구자: 들으면 기분이 어때?

김*수: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요...

연구자: 별로라는 게 뭐야? 싫다는 거야?

김*수: 예.

연구자: 왜....

김*수: 그냥 짜증나요.

연구자: *미야 너 코시안이라고 들어봤어?

이*미: 예. 우리보러..

연구자: 들으면 기분이 어때?

이*미: 왜요? 왜 물어봐요?

연구자: 아니 그냥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 궁금해서...

이*미: 맨날 물어봐. 전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물어봤는데.. 기자도 물어보고..

연구자: 그래?

조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코시안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시선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비쳐지는 것 같아 보인다.

이*미: 학교에서도 우리얘기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우리얘기하고...

김*수: 그냥 듣기 싫어요.

김*기: 몰라요.

우*강: 얘기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김*철: 그냥 놔둬요.

김*혜: 지켜워.

이*영: 저 한국인 아니에요? 왜 다르게 말해요?

김*진: 아 진짜 싫어요.

이*식: 몰라요.

최*현: 짜증나.

3.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들에는 이중언어의 문제, 부모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정서적 혼란, 혼혈인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사회 부적응 등이 있다(전경수, 2008).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말했듯이 다문화가정 자녀 주변의 교사나 부모의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자: 담미 너는 학교 다니거나 하면서 너 차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니?

이*미: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을 안 함)

연구자: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그래?

이*미: 아니요. 그냥 선생님이 자주 상담해 주고 그러는데 그냥 학기 초에 내 애들 앞에서 해 주고 하니까 그냥 싫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친하게 지내라고...

연구자: 너랑 친하게 지내라고?
이*미: 예. 그냥 그러면 애들이 신기하게 봐요.
연구자: 차라리 말을 안하는게 낫겠네.
이*미: 예. 차라리...

또 다른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자.

김*철: 학교에서 자주 선생님이 부르고 하는데 그냥 가기 싫어요.
연구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김*철: 그냥 힘든거 없냐고 하는데 말 안해요.

인터뷰 시 학생의 반응을 보면 다문화가정자녀라는 특징으로 인해 학교에서 일종의 스티그마(Stigma)가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 애들이 보잖아요.
김*기: 일어서게 하는 게 싫어요.
우*강: 친하게 지내라는데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학교가 끝난 이후 교외활동이나 주말 등에는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미: 집에서 TV보거나 애들하고 놀아요.
연구자: 같은 반 친구들이랑?
이*미: 아니요. 7반에 저랑 친한 친구 있어요.
연구자: 그 친구도 다문화가정이니?
이*미: 예. 엄마끼리도 친해요.
연구자: 왜 같은 반 애들하고는 같이 안 놀아?
이*미: 그냥요. 학교에서도 보는데(표정이 굳어짐)
연구자: 애들이 같이 안 놀아주니?
이*미: 아니요. 그냥 연락 안해요.
연구자: 애들이 연락 할거 아니야?
이*미: 그냥 만나가요.

그 밖에 연구대상 9명의 학생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수: 그냥 혼자 PC방 가서 놀아요
김*기: *강이랑 PC방 가요.
우*강: 예. 저두요.
김*철: 아빠 농사 일 도와요.
김*혜: 집에서 낚 해요.
이*영: TV봐요.

김*진: 온라인 줌 이요.

이*식: 줌 해요.

최*현: 저두요.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본인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수성에 대해 스티그마를 느끼며 학교 내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는 교내에서만 같이 시간을 보낼 뿐 주말이나 여가시간에는 그들과 같은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이 아직 어린이 이고 쉽게 말을 열지 않는 점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 밖에 연구대상 10명 학생은 모두 어머니의 나라를 한 번 이상은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얘기는 한결 같았다.

이*미: 그냥 다시 가기 싫어요.

김*수: 이제 안 갈래요.

김*기: 그냥 그저 그랬어요.

우*강: 못살아요. 지저분하고.

김*철: (그냥 아무 말이 없음)

김*혜: 정말...

이*영: 안 갈래요. 너무 싫어요.

김*진: 안 가요.

이*식: 지저분해요.

최*현: 춥고 싫어요.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의 나라를 모두 방문해 보았지만 방문 이후에는 모두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나라에 최초 방문 시 기분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도 대부분 어머니에 의해 억지로 끌려갔을 뿐 원래부터 가고 싶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이*미: 그냥 엄마가 데려 갔어요.

김*수: 가기 싫다 그랬는데 그냥 갔어요.

김*기: 그냥 그랬어요.

우*강: 그냥 갔어요.

김*철: (무응답)

김*혜: 그냥 그래요.

이*영: 안 갈래요.

김*진: (무응답)

이*식: 다른 나라 갈래요.

최*현: (무응답)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들 자녀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본인이 순수 한국인이 아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다른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가정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스티그마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차별을 얘기하기에 앞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저 내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 즉 남들과는 다른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이들 학생은 거부감과 수치심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관심과 친구들에게 소개되는 자신들의 위치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있고 스티그마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V. 결론

지난 2007년의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건수는 3만9,071건으로 전체(33만7,528건)의 11.6%를 차지했다. 국제결혼 상대방의 68.8%가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었으며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2005년의 4만3,815건(13.7%)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최근 결혼하는 부부 8~9쌍 중 1쌍은 동아시아 여성을 배우자로 맞고 있는 셈이다. 특례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입국 기회가 많아진 재중동포들이 점차 결혼을 입국 수단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을 배우자로 맞는 경우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500여명에 불과하던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2006년 9,812명으로 늘었다. 전남의 경우 2006년 결혼한 1만1,322쌍의 신혼부부 중 22.68%인 1,816쌍의 반쪽이 외국인 배우자, 그것도 대부분 동남아 여성이었다. 총각 4명 중 1명이 동남아 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것이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17.5%가 가정폭력을, 결혼이민자 가족의 30%가 각종의 차별을 경험했다.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7.2%가 낮 시간 부모의 보살핌 없이 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김오남, 2008). 이 같이 다문화가정에서 방치된 이들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기 그지없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문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만에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였고, 그에 관한 연구도 점증하여왔다. 그동안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대체로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입장의 반영으로서 ‘결혼이주’, ‘이주여성’, 또는 ‘이주아동’ 등의 용어들도 새롭게 등장하였다(전경수, 2008). 결혼을 통하여 이주해 온 여성들에 한정된 연

구들이 갖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여성중심주의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자녀의 문제가 함께 진행된다. 물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언어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준일 뿐이다(오성배, 2006).

시간이 지나면 이주여성의 문제는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의 문제를 포함하는 가정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출산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현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지만 지나면 이들도 모두 대학생 그리고 성인이 된다. 이대로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방치해 둔다면 한국 사회는 민족·문화 갈등과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영원히 제2국민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다문화가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은 확실하다.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받고 있는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003년 가을호: 29-53.
- 김병순(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5). “한국사회변동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3호: 5-23.
-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집문당.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3호: 67-93.
-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 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2003).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사.
- 양옥경 외(2007). 『가족 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4호: 137-157.

- 이동원(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원숙(2007). 『가족 복지론-2판』. 학지사.
- 전경수(2008). 『혼혈에서다문화로』. 일지사.
-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통계청.
- _____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 Face R, Elliott(1993). 『가족 사회학』. 안병철·서동인 옮김. 을유문화사.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1호: 195-220.
- 홍기해(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 2006년 4월 26일 『제74회 국정과제회의 보도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www.chosun.com>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토론문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발표문에서 제기한 것처럼 한국의 국제결혼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출생자녀의 출생 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사회적 시선', '사회적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를 접근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으로 한정하여 그 대상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또 선행된 연구들이 '이주여성' 중심의 연구들로 이루어지고 있음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 역시도 자녀 당사자 보다는 보호자와 지도교사 등의 인터뷰에 의존하는 한계성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겪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선행 연구의 한계성으로 불가능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초등학생) 10명을 선정하였는데, 2009년 (사)교육과 나눔에서 실시하는 학습 멘토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당시 11세 5명과 만 12세 5명(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졌다.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인자는 다양하다. 한국에서 이주하여 정착하는 국제이주자들은 여러 형태를 띠며 가족을 구성하여 이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자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여 정착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연구의 경계를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국제결혼의 여러 유형을 고루 정하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엄마 뿐 만이 아니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연구는 엄마나라 출신이 중국과 필리핀 두 개 국가에 한정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 출신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에 출신자에 대한 조사 대상에의 미포함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자들은 중국과 필리핀 출신 엄마들의 비해 학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과 필리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베트남보다 좀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베트남이 저개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도 각 다문화자녀들의 일반적 의식수준, 차별에 대한 의식의 정도가 달라 나올 수도 있어 이의 구체성이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이 연구가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졌는데,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단위의 표본의 척도가 근거로서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연구가 2009년의 상황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현재에 재조명하는 것이기에 ‘최근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과의 변화의 정도가 얼마만큼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의식의 변화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종단적 조사에 대한 바람도 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이었을 당시의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현재의 의식의 변화가 동일한지 아니면 새로운 의식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종단적 조사방법이 되었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또한 조사 당시 사회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 등이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횡단적 조사의 기술 역시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조사에 관한 민감성과 일정한 거부현상이 조사의 한계를 가져오는 것이 감지할 수 있어서 금번 조사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란 점에서 조사 작업의 노고를 엿볼 수 있다.

금번 학술대회의 큰 주제는 ‘한국사회의 반다문화주의의 현황과 전망’이다. 이 큰 타이틀 아래 ‘한국의 반다문화현상’, ‘반다문화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세부 주제로 삼고 있다.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는 ‘한국의 반다문화현상’에 대한 주제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아주 세밀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해내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가 반다문화 현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나 해석이 없다. 다문화자녀들의 차별문제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로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어머니나라에 대한 거부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와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지나 그에 대한 사회적 관계성과 대안제시가 요구되어진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엄마 나라에 대한 반응에서 “엄마가 그냥 데려갔어요.”, “가기 싫다 그랬는데 그냥 갔어요.”, “안 갈래요”의 반응과 함께 “그냥 다시 가기 싫어요.”, “못살아요. 지저분하고”, “안 갈래요. 너무 싫어요”, “춥고 싫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가정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스티그마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차별을 얘기하기에 앞서 가장 큰문제점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해석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적절한 현장이해이고 타당한 해석으로 아이들의 의식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그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엄마에 대한 존중감, 엄마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중의식, 자신에 대한 자존성 향상 등의 제도 시스템의 대안제시와 교육과 프로그램 도입 등 대안책의 제시가 요구되어지는데, 좀 더 그러한 대안에 대

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 467가구 중에 17.6%가 왕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4~6학년 3,507명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경험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19.8%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자녀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의 비율은 다문화가정 자녀 17.6%와 내국인자녀 19.8%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내국인자녀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자료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내국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조사가 함께 병행되지 못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집단을 비교하여 조사한다면 조사의 결과와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경험이 높다’라는 것은 내국인 자녀와의 비교수치 없이 단순 발표되어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 문제는 비교 연구를 통해서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경우 조사의 내용이 내국인자녀와 비교·분석하는 것에는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적절한 고민 속에서 내국인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비교, 부모에 대한 자존성 및 본인 스스로들에 대한 자존성의 정도를 측정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과 낮은 자존감 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민사회 속에서 사회통합과 사회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장래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을 진지한 세부 연구와 고민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 협력과 상생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앞당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토론문

박찬옥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원고를 읽으면서 두 가지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관련 연구들이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에 초점을 두었던 경향에 비하여, 우리 사회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아동(자녀)의 현실(사회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어머니보다도 자녀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이들이 어린 시기에 겪는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기에 초래할 사회 정서적 문제는 화산 폭발과 같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나 정책 연구들은 한국 사회·문화 중심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수동적 존재,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이들의 인격적 자존감 증대 방안 보다는 단순한 경제적 물리적 지원, 문화 동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에 주력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정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관련 사회적 문제는 점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아교육 및 가족학, 간호학 분야 등에서 다문화 가정의 부부 및 가족 관계 구조에 의미를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며, 이는 조민식 교수님께서 지적하듯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결혼이주여성)에 국한하기 보다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시댁 식구 및 남편(한국인),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인적 자원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자녀)이 생애 출발점부터 부당한 편견으로 인한 불평등을 겪는다는 것은 사회 화합과 균형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둘째는, 양적 통계 분석 보다는 포커스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10명의 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통계치와는 다른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필요 이상의 친절한 도움이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당사자로서 느끼게 되는 사회적 차별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아직도 편견적 굴레에서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론자의 소임 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사소한 몇 가지를 논평하고자 함

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심리상태와 욕구 불만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범주화 하였으면 합니다. 아동기는 집단 소속감과 집단 내 위상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친구관계 및 집단생활은 자아 개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 오가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내포된 심리상태, 그 심리상태 여하가 아동들 스스로 규정짓는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애썼는지, 아니면 체념하고 있는지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에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괴롭힘이나 왕따 등을 인종 차이에 기인하는 외모 중심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심층 연구의 맥락성, 요인 간 유기적인 관련성이 더욱 설명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시선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봅니다. 특히 학급 교사가 친절하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해 준 행동과 말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존심을 위축시키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서 스스로 격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부정적 사고로도 이어져서 흔히 강조하던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는 글로벌 사회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본 연구가 「사회적 차별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터뷰 질문이 차별을 전제로 제시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차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니?”라고 물을 때 아동은 차별에 국한해서 부정적 생각만 떠오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면서 언제 좋았어? 누굴 보면 기분이 좋아? 근데 싫을 때도 있었어? 언제 싫은데?”등 질문을 이어나간다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생각하는 ‘차별’의 개념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차별이라 느끼는 상황적 맥락이나 언어의 조건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차별만이 아닌 감사할 거리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인식하는 사회적 차별문제를 알아보는 것도 좋으나, 알아보는데 그치기보다는 차별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차별 인식을 극복하는 교육적 방안도 제언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연구의 주제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로서 차별문제 다음에 이어질 행동이 실태조사에서부터 해결(극복) 방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마감하면서 조민식 교수님이 결론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방치해 둔다면 한국 사회는 민족·문화 갈등과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들

은 영원히 제2국민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본 연구의 주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각자의 노력을 촉구하는데 좋은 모티브가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조동환 (외국인범죄척결연대 공동대표)

1. 머리말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 들면서, 국가 간 노동력이 이동하거나 남녀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에 이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의 저 출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한편, 한국전통사회의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에 따라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차지하는 국제결혼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상회하고 있다.¹⁾

노동현장에서는 약 140만 명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인해 서민일자리 감소 및 임금인상의 정체, 인권문제, 임금체불,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문제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는 불쌍하고 가련하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인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기만책을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그 정체가 불분명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무리한 다문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60-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길거리에서 피임기구를 나누어 주면서 산아제한정책을 쓰던 정부가, 대조적으로 현재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혼혈주의를 표방하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1) 통계청 다문화가족관련 통계

성별	유형별	2008	2009	2010
남자	계	36,629	33,862	35,098
남자	출생한국인	27,987	24,874	26,182
남자	귀화한국인	601	830	955
남자	외국인	8,041	8,158	7,961
여자	계	36,629	33,862	35,098
여자	출생한국인	7,475	7,223	6,685
여자	귀화한국인	991	1,497	2,139
여자	외국인	28,163	25,142	26,274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국가적 재앙이라는 위기의식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타계하고자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도입한 다문화 정책이 향후 가져올 제반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첫째,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국내외적 상황을 짚어보고 다문화정책이 가져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관한 국내의 치안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문화적 충돌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 혼혈3세대, 혼혈4세대를 거치면서 발생될 민족정체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외국인은 우대하지만 국민은 홀대하는 역차별적인 다문화지원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급격한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각종 법률의 제정과정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상기와 같은 고려를 하는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들어 다문화 정책의 폐해와 실패 사례를 지적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부추기면서 한국의 거대재벌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외국 인력의 해외 송금 등으로 인한 국부유출, 해외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기술유출 등을 살펴보면서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추론해 보겠다. 그리고 이를 지금의 인구정책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II. 한국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배경

1.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 추진배경

출산율 저하는 바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데다가, 3D업종 기피현상은 산업체에 심각한 산업체의 존폐위기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로부터 노동력을 필요로 한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 전체 인구감소와, 농촌출신 청년층의 대거 이농현상에 따라 농촌지역의 학교가 대거 폐교하고 노령층만 남아 농촌을 지키는 형편이 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결과, 가계家系를 이을 남아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여아를 낙태시키면서 여아부족으로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었다. 이처럼 한국사회 내 여러 문제점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결혼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 도시서민이 혼처를 찾아 국제결혼을 강요받는 형국을 그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많은 한

국의 농촌총각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우즈베크·필리핀 등 외국인 신부를 결혼이민으로 국내에 유입시킨 결과, 외국인의 유입은 가출, 보이스피싱, 매춘, 사기, 도박, 절도 등 각종 외국인 범죄를 끌어들이는 통로로 변질되었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처럼 인구문제를 근간으로 하여 이들 외국의 노동력, 결혼이민자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2. 다문화정책과 각 부문별 관계

다문화 *multi-culturalism*라는 말은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를 포괄하고 있는 용어이다. 건국 초기부터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국가에서는 형성 초기부터 이민자들이 중심되어 근대적 국가 체계를 형성하였고 원주민이 아닌 새로운 정착민들로 구성된 인종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더욱이 이들 국가 역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근대적 민족,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 국가에 소속된 여러 인종들이 하나의 의식체계를 공유하는 문화적인 동화주의를 내포하고 있기에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한 국가 내, 다문화 사회’는 허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을 비롯한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역시 여러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한편, 동북공정이나 한족중심의 역사 재편성, 중화사상의 강조를 통해 중국이라는 커다란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을 흡수·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분단국가의 상황과 주변의 여러 패권주의 국가들과의 역학적 관계에 놓인 한국이, 오늘날 다문화정책을 의도적으로 표방하고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정책의 무리한 진행이 불러일으킨 여러 마찰들을 살펴보면서 다문화정책의 당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다문화정책과 국가안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14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한국 여성과의 혼인을 사용한다.

국적법 제5조에서는 한국 내에 5년간 거주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락으로 국적을 취득하지만, 국적법 제6조 제2항 3호는 결혼이민자가 결혼한 지 3년이 되고 한국 내 체류2년인 자로서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영주권 및 국적취득이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간이 귀화절차를 인권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거나 입법을 해온 내용으로 이것이 외국인 범죄를 조장하고 한국여성 피해를 대거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외국인 귀화자를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되겠다.

분명 이들은 법적으로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으니 한국인이다. 그러나 과연 한

국에서 돈을 벌어 가겠다고 입국한 외국인인, 한국 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들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목적에 있어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국에서 1년이나 2년을 걸려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단 한 달에 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국적을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 속에는 공통된 의식체계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지역공동체, 혈연공동체, 언어공동체, 역사운명공동체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역사운명공동체로서 일체감이나 그 어떤 교육도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은 부재한 채 단지 노동력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조치로서 다문화정책을 추진, 약 2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 성과를 얻지 못하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따름 아니다. 게다가 겨우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한국어 등 매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국가에 아무런 공헌이나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지도 않은 자를 귀화자들이 얼마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약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체류의 서남아시아 무슬림들은 적어도 국가보다는 종교 지상주의자들로서 그들 세력이 그 수가 적을 때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살겠지만 그 수가 많아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분리 독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살폭탄테러, 요인암살, 폭동, 내란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 CIA 2007년도 보고서 *THE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이슬람이 1%미만 일 때는 무조건 평화를 가장하고 5%에 육박하면 자생 테러단체가 생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 상황을 두고 볼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이들 세력은 분리 독립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무장단체를 형성하여, 해당 국가 내 치안은 물론 정부군과의 교전을 벌여 무수한 인명이 살상시키는 등 국가안보상 커다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남부, 아프리카, 이란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탄테러가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내세운 단체는 많지만, 국가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단체나 기관이 희귀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에 보다 중시해야 할 국방부의 관료가, 다문화 출신자녀 극소수의 군 입대를 빌미로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중, “민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한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역사운명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자도 국민이 되도록 하는, 국적법 제 6조의 ‘간이귀화 절차를 통한 국적취득’ 내용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위선적 외국인들을 대거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족의식도, 국민의식도 결여된 귀화 한국인이,

출신국과 한국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을 때 한국의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자신의 출신 국가가 한국의 적대적 국가편으로 섰을 경우,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특히나 현 한국의 국제정세로 비추어 볼 때, 북으로는 개혁개방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근 국가 경제력이 급상승하면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성향이 눈에 띄게 강해지는 러시아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적 상황이다. 여기에 한반도 내부에서는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된 상황에서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마당에, 계층·지역·빈부 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저소득 외국인에게 국적을 남발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들여 온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제한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한 후, 적절한 권익보장, 작업장이탈방지, 불법체류원천봉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 다문화정책과 외국인범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의 조폭세력은 65개 과, 추산 인원 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국조폭은 현재 국내조폭과 잠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세력이 커지면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들은 당장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외국인 인권단체의 보호가 무분별하게 미침에 따라 그들이 흥기로 위협, 저항하는 일이 많다. 인권단체는 외국인에 의한 살인, 보이스피싱, 강간, 절도피해에 따라 희생되는 자국민,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당한 단속직원의 인권 및 권익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및 인권단체는 불법 체류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그 의미를 미화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피해에는 침묵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체포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과잉단속으로 몰아 각종 시위를 벌이는 만행을 일삼는다.

외국인의 범죄는 날로 조직화, 흉포화 되고 있다.²⁾ 사실 수원토막도살사건과 같

2) 자료 1. 외국인 범죄통계 경찰청 발표

(단위: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3	6,144	32	137	49	630	2,071	834	120	2,271
2004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218	3,402
2005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82
2006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2007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2008	20,623	85	133	114	1,343	4,940	7,472	694	5,842
2009	23,344	103	260	126	2,001	5,322	4,792	778	9,962

은 외국인 강력범죄는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인 3명의 여자 초등학생 1명 집단 성폭행(2010. 7. 21),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 살해한 시신을 조선족 손 씨가 유기, 방글라데시 인이 여중생 A양의 성추행(집행유예로 그침.2010. 8. 24), 남편의 성기를 훼손한 캄보디아 여성(2010. 11. 24), 몽골여성이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찢러 중태(2010. 6. 8), 조선족 심 씨 천안함 사고원인이 말다툼으로 한국인 동료들 등 뒤에서 칼로 자상(2010. 5. 27), 베트남 며느리의 시어머니 밥에 독살기도(2011. 8. 9), 베트남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2명 살해 및 상해(2010. 12. 4), 경기도 화성의 17세 김소라 양을 방글라데시인이 살해 및 유기(2010.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흉기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2011.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의 유두를 잘라 삼킴(2012. 3. 19), 조선족 남편의 한국인 아내 목 졸라 살해(2011. 7. 7), 우즈베크 노동자가 동료3명 흉기로 살해(2012. 2. 6),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41) 20대 한국여성 살해 및 유기, 군포시에서 조선족 박 모 씨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사건들이 있다.

특히나 이번에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수원토막도살 사건을 살펴보면, 범인 우위엔춘에 의해 피해자 여성이 강간·살해되어 시체를 한 봉지만 20개의 살점을 균등하게 14개 봉지에 280 살덩어리로 발라낸 점, 가정용 칼로 살과 뼈를 정교하게 단시간 내에 분해한 점, 우위엔춘 집 마당에 타다만 뺏조각이 있는 소각로가 있는 점, 단기간에 노동일로 생계를 꾸리는 피의자가 15번이나 중국을 왕래한 점, 전화기가 4대나 있었던 점, 우위엔춘 거쳐간 곳에는 153명의 여성실종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업자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뚜렷하리라 여겨진다.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2,543건이 검거되어 폭력 5885건, 지능범 4487건, 절도 1741건, 마약류 720건, 강간 156건, 살인 83건의 순이었는데 폭력과 강간은 2009년에 비해 10.6%, 23.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428건으로 55.1%, 베트남 2324건, 미국 1509건, 몽골 1304건, 태국 1099건의 순이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조직폭력배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

년도	내국인	외국인	계	외국인비중	내국인범죄 증가율	외국인범죄 증가율
2003	2,290,728	6,217	2,296,945	0.27%		
2004	2,276,922	7,173	2,284,095	0.31%	-0.60%	15.38%
2005	1,957,258	8,313	1,965,571	0.42%	-14.04%	15.89%
2006	1,921,308	11,421	1,932,729	0.59%	-1.84%	37.39%
2007	1,978,046	11,816	1,989,862	0.59%	2.95%	3.46%
2008	2,453,038	19,859	2,472,897	0.80%	24.01%	68.07%
2009	2,495,819	23,418	2,519,237	0.93%	1.74%	17.92%

자료2. 2010. 3월 경찰청 발표

* 외국인은 중국,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몽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자유중국,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인도네시아, 기타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이하 동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인 범죄는 마약,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인구비례로 비교할 때 한국인 범죄보다 약 3배정도 빈발하고 있으며 안산, 서울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 경남 양산 등 외국인밀집 지역은 치안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한국주민이 기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범죄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지만 한국 언론은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산 중에 있는 한국인 부부를 남편을 나무에 묶어놓고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인을 운간하고 그 부인이 자살하고 그 남편이 이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엽기적 사건도 있었다.³⁾(주3) 만일 한국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론은 적어도 3년 3개월을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으로 믿는다. 부산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탁티황옥은 정신이상자 남편에 의해 8일 만에 죽었는데 한국 언론은 이를 3개월간 밤낮없이 대서특필했다. 인권단체가 때를 만난 듯 언론을 총동원하여 야단법석을 떨어서 논자도 그녀의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역으로 베트남의 정신이상자 남편이 한국인 부인을 죽였다면 베트남 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병자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부산에서 탁티황옥이 죽은 날 김포에선 이집트 출신 노동자에게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김 모 여사장을 30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하여 농수로 옆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신이상자 살인사건은 크게 부각된 반면 강도 살인 사건을 관심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축소보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자유는 심각히 훼손되어 있다. 언론은 다문화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범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보도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작년 논자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약4시간 한 일이 있는데 이 때 외국기자도 한국 언론이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008년에 일어난 강수현 양(당시 13세) 피살사건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5일 만에 필리핀 노동자에게 칼로 12군데 찢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으나 이 나라 언론은 경기일보 등 극소수의 신문을 이를 보도하였을 뿐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등은 입을 닫아버렸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내세운 여성가족부도 입을 닫아버렸고 이 사실에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 말을 한 적도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의 김 소라양(당시17세)은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 강간 살해되어 쓰레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지는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의 CCTV에 찍혀 털미가 잡힌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 용인의 모 인권단체 간부의 반응이었다. “이들의 범죄는 모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3) 일요시사 2012. 2. 9 기사.

용인의 외국인노동자 상담 센터 오모 사무국장의 반응이었다.⁴⁾ 어린 17세 소녀가 피살된 죽음 앞에서 외국인의 성욕을 더 걱정하는 인권단체는 우리 국민의 비극적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동정도 보내지 않던 인권단체의 무분별하며 반민족적인 반응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인권은 외국인에게만 존재하는 전유물인가. 이 같은 반민족적행위에 대한 반민족행위에대한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일민족인 한국인이 언어 습관 중 “살색”이라고 한 표현이 인종차별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라고 칭송되는 김 모 목사가 외국인노동자를 내세워 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의 언어습관마저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을 간섭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인권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노동자로 또는 결혼이민자로 체류하는 동안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덮어놓고 지원하며 그들의 범죄행위마저 옹호해선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편파성 보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향후 10년 전후 서울한복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다문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들=국제결혼피해

다문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단연 국제결혼자이다. 남녀성비문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를 무릅쓰고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크 캄보디아 등지로 가서 맞선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의 강요로 맞선을 본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뇌물로 얼마든지 가짜서류를 만들어오는 후진국의 혼인상대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창녀인지 술집작부인지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은 아예 없고 선보는 자리에서 찍으면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혼인중개업체는 베트남 중국 등지에 우리나라 몇 명의 브로커가 국내의 1천여 개의 결혼중개업체와 거래하며 결혼이 성사되어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바로 결혼식을 거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애용되고 외국인 여성들은 신랑의 나이차이가 20년이 넘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제결혼피해는 외국인이 한국체류를 통해 취업, 국적취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나타난 피해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결혼 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같다.

4) 스포츠서울 2003. 12. 1

<한국여성의 피해사례>

- (1) 합법적 체류 및 이슬람선교 목적의 결혼: 파키스탄인 B씨는 고국에 배우자와 자녀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과 이중결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혼인취소와 함께 재입국 불허조치를 받게 됨.(주5)
- (2) 체류목적으로 이용되는 무슬림들의 지체장애자 여성과의 결혼; 방글라데시인 C씨는 한국여성 정신지체자 D씨에게 햄버거와 신발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동거에 들어갔으나 체류를 위해 D씨를 이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D씨의 간곡한 호소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줌.⁵⁾(주5)
- (3) 한국여성과의 혼인 후 무슬림개종강요 및 살인범죄;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 M씨는 2003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보다 20년 연상인 한국여자와 혼인한 후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려 부인이 가출하자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국적취득을 위한 동거3년을 입증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뒤 미성년자 17세 한국소녀 S양을 컴퓨터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살해한 뒤 이불에 싸서 마대자루에 넣은 뒤 집 앞 공터에 버린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 CCTV에 찍혀 발각됨.⁶⁾
- (4) 체류목적의 정신지체여성과의 혼인; 의정부의 조 모 씨의 정신지체2급의 누님이 있는데 배가 불러보여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바, 30세전후의 방글라데시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조 씨의 모친이 출산 비를 가져오라고 하자 종적을 감춤.

이처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계 불법체류 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이 비교적 어려운 장애자, 정신박약자, 노처녀,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여성들을 접근하여 임신시키고 결혼하자마자 표변하여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국적을 취득한 후로는 바로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본국출신 아내와 혼인하여 한국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남성의 피해사례>

- (1) 국적법 6조의 간이귀회절차를 악용한 사례: 서울 중랑구의 정 모 씨; 베트남 여자가 아이를 영주권취득의 목적으로 낳아서 베트남에 버리고 몰래 귀국하여 베트남노동자와 동거하며 귀가거부. 대전의 김 모 씨 사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아이를 두 명을 낳아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증을 발급받은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베트남 남성과 불륜, 동거하며 이혼을 요구함.(외국인범죄척결

5) 연합뉴스 2010. 8. 19 기사.

6) YTN 뉴스 2010. 8. 13.

연대 상담소장자료)

- (2) 한국에 취업목적을 위해 혼인비자를 받기 위한 결혼; 두 번의 국제결혼이 모두 신부의 사기결혼으로 끝남으로써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창원시에선 베트남 아내가출을 비판한 한국남성이 제초제 마시고 자살⁷⁾)
- (3) 성매매 목적의 위장결혼: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성매매한 중국인 여성 36명을 불구속 입건⁸⁾)
- (4) 유부녀가 위조서류로 결혼; 경기도 용인의 장 모 씨; 맞선자리에서 유부녀가 옆에 있는 딸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맞선을 보고 혼인비자로 입국한 즉시 바로 도주하여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본국남자와 동거하기.(외국인범죄척결연대 상담소장자료)
- (5)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남자와 4번이나 반복하여 결혼한 우즈베크 여성.
- (6) 남편을 이종사촌 오빠라고 속여서, 한 지붕아래 두 남자를 한명은 애인, 또 다른 한명은 법률상 남편으로 데리고 살다가 기회를 보아 우즈베크 남자 함께 우즈베크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가재도구를 모두 훔쳐 도망하여 고발조치.(외국인범죄척결연대 상담소장자료)
- (7) 혼인비자로 입국한 뒤 가출한 후 본국남자와 동거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걸려 경찰조사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속된 베트남 여성.
- (8) 인천의 이 모 씨; 러브인 아시아를 보고 이에 빠진 부친의 강요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업체와의 소개료 문제로 다투다가 업체사장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례.
- (9)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밥그릇을 내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남편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고도 베트남 깡패들이 안산시 원곡동 집에 나타나 협박하자, 공포심에서 노부모들은 사법처리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사법처리 말라며 진단서 상처사진 등을 빼앗아 버림.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출한 후 매춘을 일삼고 있으며 안산 원곡동 대림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에는 외국인여성들의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업자에 의한 피해>

- (1) 결혼중개업체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우즈베크 여성을 한사코 한국에 들이 갖다가 다 시 귀국하라고 강요하여 입국했다가 동거를 거부하며 자살소동을

7) 2010년 12월 17일자 뉴데일리

8) 2010. 8. 13 YTN 뉴스

벌여 업체를 상대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이 무혐의처분하자 항고하였는데 검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희귀한 경우.

- (2) 가출한 중국여성이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법적상 혼인 중에 있는 여성을 중개업체가 숨겨놓고 다시 다른 한국남성에게 소개료 5백만 원을 받고 소개함.
- (3) 에이즈 성병이 있는 여자를 소개하여 한국 신랑이 성병에 감염된 사례.
- (4) 첫날밤 성관계를 거부해도 결혼업자는 처음이라서 그런다며 무마하고 신부가 입국 후 인터넷 채팅, 국내의 본국남자와의 빈빈한 전화 등으로 가출.
- (5) 홍성의 차 모 씨는 중국여성과 맞선 후 인생의 중대사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하자 혼인을 거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업자가 다른 베이징 대학출신으로 맞선을 주선할 것처럼 이메일을 다른 여성에 대한 맞선계획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여 약4천만원의 손해를 보고도 결혼생활을 못해본 피해를 봄.
- (6) 한국에 혼인비자로 입국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2달 정도 체류하다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천안의 박 모 씨를 척결연대의 법률적 지원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줌(베트남에 서부터 성관계 거부하였지만 업체가 강요하여 결혼함.)

국제결혼은 외국인에게 한국입국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으나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부나 국회에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전혀 관심조차 없고 인권업체만으로 100% 구성된 공청회를 통해 각종 입법을 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35,098건, 2009년 33,862건 결혼하여 2010년14,319, 2009년 14,653 이혼하였는데 이는 40.7% 43%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적 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혼건수까지 합하면 거의 8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거나 현재 혼인생활중이라 하더라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불안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의 “러브인 아시아”를 필두로 거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신문이 일제히 다문화 다문화를 외치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난하고 불쌍하다며 동정심을 유발시키며 국민을 대상으로 세뇌시키는 한편으로 전국에서 한국인들은 국제결혼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과 혼인하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세뇌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피해를 상담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대상에 한국남자나 여자는 제외되어 있는 점이다. 오직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오직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업무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편익만을 위한 정책만을 개발하고 있어 남성에게겐 성차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므로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 중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은 의외로 많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면 외국인 여성도, 남성도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귀화자 외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향후 30년이 지나면 순수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된 혼인을 법률혼주의에 의해 정상적인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입법·사법·행정 모든 기관이 외국정부의 대사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인만의 편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며 외국인 인권을 명분으로 돈벌이하는 업체를 덮어놓고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을 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외국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덮어놓고 외국인의 편을 드는 판결을 하고 있다.

4) 자국민의 각종 역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단체의 비리

일본인 여성 사야카씨(31세. 한국관광공사 근무)는 한국의 다문화지원 정책을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엉터리 선심정책”이라 비판했다.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결혼식, 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 초대권, 무료 건강검진, 고향방문 항공권, 토픽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 시 우선 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꼽혔다. 이 같은 정책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하며 사야카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38만원의 보육료를 거절한다.”(주9)

지난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다문화예산이 2000억을 쓰고도 외국인의 눈에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한국인을 역차별 하는 정책임엔 틀림없다. 또한 “다문화, 다문화”를 강조하며 기존의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를 구분하는 말자체가 “다문화 가정”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차별을 은연중 내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상식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지원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혼혈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실제로 받는 차별은 정부의 예산에도 다문화예산은 매년 증액되어온 반면 국민의 장애인 저소득층의 예산은 매년 전액취소 내지 감액되어 온 것은 차별의 구체적 증거라 아니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정부가 러브인 아시아 등의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정작 국제결혼하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

9) 2012년 1월 16일자 쿠키뉴스

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외국인 범죄로, 국제결혼 피해를 보고도 외국인의 눈치를 보며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 말도 잘못하면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매도당한다. “살색”이라고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도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마저 간섭을 받고 있다. 수천 년간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마저 간섭받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간섭이자 내정간섭인 것이다. 현재국민 중의 극소수인 외국인을 위해 국민은 피해를 보아도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인지 묻고 싶다.

전국에서 외국인 보호인권단체는 3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삼성등 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지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직업으로 외국인을 돕는 것은 차치하고 국민혈세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무분별한 인권단체의 비리를 그 끝을 모른다. 위장결혼으로 들어온 베트남 여성에게 대구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 모 목사는 서울가정법원에 5명의 베트남 위장결혼여성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비밀리에 일인당 50만원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고발하여 3년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도 사법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상담소는 또한 3년간 딸을 데리고 가출한 베트남 여성을 숨겨두고 아내를 찾아 딸을 찾아온 아빠에게 이 사실을 숨기다가 우연히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아내를 발견하고 딸과 재회하다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후 바로 인권단체의 고발로 경주의 이 모 씨는 “약취유인”으로 경주경찰서에 4시간 동안 긴급구속이 된 바 있다. 대구의 모 이주 여성 인권 센터는 베트남 현지에 4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여러분이 가정폭력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8개 국어로 상담을 합니다.”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해외광고는 이주여성단체의 컴퓨터에 수용된 외국인의 수와 그 컴퓨터유통기간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일종의 호객행위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한국의 國格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반민족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외국인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범법자는 호텔처럼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단과 각종 문화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역차별 정책은 그동안 자국민을 차별하는 외국인 우대, 자국민 홀대의 정책으로서 반국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우책愚策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권업체가 권력기관화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베트남 여자가 데리고 도망친 딸을 찾은 아버지를 대구의 모 인권단체가 고발하였다고 하여 경주경찰서가 약취유인으로 경주의 이 모 씨를 구속시키는 등 인권단체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남 창원 의 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우즈백 여성이 부산에서 목욕탕에 입욕을 거부당한 헤프닝이 벌어지자 이 단 하나의 헤프닝을 계기로 때를 만난 듯

기자회견을 하며 모든 언론들이 이를 박자라도 맞추듯 일제히 보도하면서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 것이다. 물론 목욕탕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입욕을 금지당한 것은 인권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목욕탕 주변 부산역 앞 상해거리와 러시아 거리는 외국인 여성들이 매춘부로 활동하는 곳이어서 야간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특수지역인데다가 그 인근의 주민들 간에는 성병감염의 우려가 높았다는 사실은 아예 짝 빼어 버리고 목욕탕 주인의 주장이나 실정은 보도조차 않은 등 매우 편협하고 편파적인 선동적인 보도를 통해 그들 인권업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의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이나 모두 중요하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나 권익, 그리고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인권은 소중하지만 외국인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2011. 11. 28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민주당 김 모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반대 토론자 없이 100% 이주여성단체만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피해자라고 내세운 왕 모 중국여성은 위장결혼여성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검사가 최대한 아량을 베푸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결정을 한 것이다. 중국 위해시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공모하여 입국한 위장 결혼여성을 피해자라며 인권단체가 이를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¹⁰⁾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위장 결혼 중국여성에게 인권을 빙자하여 이권을 추구하던 단체들이 달려들어 이 같은 짓을 해도 되는 지 의문스럽다.

매년 자국민 장애자 및 저소득에 갈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다문화예산은 40%씩 증액되어온 것은 차별의 대표적 수치라고 말 할 수 있다. 다문화의 미친바람이 불어 닥친 뿌연 안개 속에 목적지를 잃고 대한민국 호라는 선박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

5) 다문화정책과 민족의 정체성

수천 년 간 단일민족을 자랑하고 이를 가르치던 정부가 갑자기 다문화를 광란적으로 외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문화를 역설하고 2000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사기 결혼자·위장 결혼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인이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그 자녀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이혼하고 다시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얻게 된다. 따라서

10) 국회입법조사처 2011. 11. 28 결혼이주민의 체류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국적의 귀화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고 있다. 30년이 아니라 20년만 되어도 한국인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지닌 한국인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30년 전 산아제한 정책을 주무르던 정책당국자들은 지금 인구문제로 이처럼 정책당국자들이 정신 줄을 놓고 허우적거릴 줄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30년 전, 20년 전 이처럼 산아제한을 주창하던 정책당국자들이 이처럼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다문화정책을 입안한 정책당국자는 각종 인종분류, 갈등, 각종범죄, 폭동, 자살폭탄테러 분리 독립을 위한 내전으로 이 나라가 처할 상황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 무슬림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문화적 충돌, 외국인 범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 그렇지 않아도 분단된 나라에다 남쪽도 동서로 분열된 마당에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민족의 정체성은 국기를 뒤흔들 만큼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6) 다문화 관련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

통상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상의 공청회를 거친다. 그런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관련 입법들은 하나같이 찬성의견자들로 100%로 이루어진 이주여성인권을 빙자한 단체주도로 일사천리로 민주당 김모, 전모의원 등의 주도로 개정되거나 삭제, 입법되었다. 재판에서 원고만으로, 또는 피고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듯 찬성, 반대 토론자를 고루 배치하여 열띤 토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련 법률들은 마치 인권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맘 내키는 대로 법률을 입맛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하여 온 것이다. 국적법 제6조2항 제3호 간이귀화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가정폭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무제한 체류권 보장) 등 관련 법률들은 일방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 반대토론자 없이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예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않던 언론이 외국인에게 조그만 잘못은 대서특필하고 인권단체는 때를 만난 듯 각종 법률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것은 국가민족공동체의 사실적 지배와 그 보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재정적 지원으로 국민을 적대하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그 반역행위를 방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몇몇 인권단체의 요구로 너무나 쉽게 각종 법률을 반대 토론자 하나 세우지 아니하고 제정해온 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다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Ⅲ.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 검토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사르코지, 독일의 메르켈도 모두 “우리는 다문화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프랑스 이민자 폭동사태는 우리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 교외 빈민가에서 아랍계 청년들의 경찰과의 총격전 등 사회적 불안 및 갈등을 조장하여 미래의 한국도 이런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 외국인이 약 140만 명으로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 정치적 압력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영국도 외국인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교육도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영국수상 캐머런도 “우리는 다문화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 선진각국의 외국인정책은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외국인정책 사례>

- (1) 싱가포르 - 201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폭 인상된 부담금 물립.
- (2) 일본 - 일본계 남미 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 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 (3)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 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 (4) 미국 - 새 이민 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 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 (5)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음 (작년에 법 개정),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
- (6) 호주 정부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 제과, 요리 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기로 새 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 다문화

- 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 시민부"로 명칭개정.
- (7)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8)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 (9)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 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배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 독일은 18개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 숙련직 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 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 강화함.
 - (10)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 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 (11)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 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행사를 할 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 (12)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IV.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그 해결방안

상기에서 본 바, 다문화정책은 술한 문제만을 야기 시키는 우책에 불과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한 곳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그 이동을 막고 철저히 국익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은 강성노조의 끝없는 임금인상 등 각종 요구로 각종 시위, 투쟁으로 몸살을 앓다가 공장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노동자와 임금경쟁을 시킴으로써 임금을 억제 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3D업종에 근로기피현상은 첫째 작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가 산업시설 안전을 담보할 시설의 확충에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50년이 되기 전에 이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외국인 문제로 분단된 마당에 남쪽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데다 여기에 계층·성별 지역 노소간에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을 1159만 명을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 나라는 망해 버릴 것이다. 민족이 말살되어도 좋다는 반민족적인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가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통합도 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불려나는 외국인의 수는 영구분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민족적 일체감으로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지속시켜온 배경은 누가 뭐라고 하던 역사운명공동체 의식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운명공동체 정신이 쇠퇴하여 가는 동안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 증가에 따라 통일로 가는 길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와 민족이 와해되어도 좋다는 특권층은 이중 국적으로 국난을 당하면 외국으로 피신하면 되겠지만 이 나라 서민대중은 고난의 역사 앞에서 그대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나 민족공동체가 말살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다. 문화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인구문제의 해결방안>

- (1) 대학진학은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가 입학원서를 내면 입학을 허가하되 졸업이 어렵도록 학점관리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 (2) 모든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 (3) 모든 공직, 기업체에서 학력 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능력에 따른 임금을 실시하고 모든 공직자는 2년마다 재임용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사회도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 (4) 여성도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하는 불공평한 법을 개정하여 군 입대를 하며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모든 공무 및 선출직 공무담임권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군입대 하려는 여성이 임신하면 군 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하되 군가산점을 부여토록 한다.

- (5) 기혼·미혼 불문하고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국가가 확대 부담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방안에는 왜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보이기 마련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인 것이다. 3년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이 군입대하는 법률제정에는 여성가족부 인권업체,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헌법11조의 남녀평등정신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여성은 약자라는 고정관념으로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것을 인정하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신한 증거를 산부인과에서 임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대를 보류하고 출산 후에는 출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완전 면제하도록 하되 군가산점을 군필자와 똑같이 받도록 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허위로 임신증명서 출산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즉각 강제입대토록 하는 동시에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면 이를 악용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출산만 하면 임신 출산 육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모든 국민은 부담 없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그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면 인구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한 2000억의 혈세를 인구문제에 투입했다면 이미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닦고도 남았을 것이다. 양성 평등가족부를 신설하고 인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전제아래 다음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피해의 해결방안>

- (1) 우선 불체자단속은 경찰과 출입국당국이 공동으로 하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유학, 취업, 결혼 이민자 중에 입국목적에 어긋나는 외국인의 귀화나 영주권을 허가한 외국인을 재심사하여 국적취득전후의 행적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해악에 끼친 자를 국적이나 영주권을 박탈한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 (2) 공청회에서 100% 인권업체가 반대 토론자 없이 제정된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다시 합리적으로 재입법이 되어야 한다.
- (3) 인권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에게도 변호사 선임, 재판 지원 등 혜택을 동등하게 정부는 부여해야 한다.
- (4) 외국인 조폭을 철저히 발본색원, 추방하고 서남아시아계 남성의 입국목적에 합당치 않은 활동은 즉시 추방 조치함으로써 국내치안을 확보하고 외국인범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첩보, 추적 등의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5) 취업, 국적취득 등 혼인 외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전용 신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한국 입국 및 체류목적의 혼인을 무효화하고 손해를 변제한 후 영구추방하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배우자외의 신원보증금지, 체류목적의 재혼금지 등을 입법을 해야 한다
- (6) 국제결혼인신고의 2년까지 가신고 기간동안 혼인의 진정성 확인 후, 정식혼인신고의무화, 위장결혼 시 국민의 신고로 조사 후 추방실시, 형법에 사기결혼죄 신설, 가출 후 타인과 동거자의 배상및 추방, 외국여성의 매춘의 가중 처벌 및 손해배상의무화.
- (7) 인권업체나 노동조합이 불체자의 단속을 간섭하거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즉시 긴급구속하고 단속직원에게 총기, 가스총 수갑, 실탄 등 체포에 필요한 보호 장구 및 무기를 휴대하며 불체자의 저항 시 발포 하도록 하며 인권시비로 해직된 경찰 및 출입국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며 해직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제조사후 복직시킨다.
- (8)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절차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국민의 신고로 조사 후 손해 배상 후 즉각 출국시킨다.
- (9) 외국인입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로 한정하여 입국시키고 입국을 허가한 공무원이 향후 입국한 외국인에 각종 범죄, 국민피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입국허가책임제 실시)
- (10) 3D업종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자국민이 기피하지 않도록 하며 이 업종에 내국인이 취업코자 할 경우 연령제한 폐지 등 수월하도록 하도록 권면한다.
- (11)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이동을 막고 이동할 경우 즉각 추방하고 불체자를 채용한 사업자는 처벌하며 불체자를 비호하는 자는 처벌한다.
- (12) 외국인 범죄 피해 및 국제결혼피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한다.
- (13) 출입국 당국이 보유한 외국인의 지문 출입국 기록은 경찰의 수사당국도 즉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 (14) 외국인의 입국 시 준법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불체자의 저항할 경우 발포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서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V. 맺음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미국, 호주, 중국 같은 대륙국가와 혼동하여 이미 영국의 캐머론도, 프랑스의 사르코지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용도 폐기된 정책을 수입하여 이를 강행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지 대기업의 비위를 맞추며 외국의 대사관이 해야 할 직무를 스스로 하는 사대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노동력 및 인구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정책이라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 민족말살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이 나라가 마치 중국대륙 캐나다 대륙 호주대륙 미국대륙으로 착각한 채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20, 30년 후에는 이 한민족은 소수자로 남고 민족공동체의식이 불분명한 국가 구성원의 급증으로 민족공동체는 와해되어 국가공동체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인하여 국가는 영구분단으로, 망국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의 측면에서도, 다문화정책은 국가의 안녕 및 사회 불안 및 갈등을 준비하여 한반도 남쪽을 와해시키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귀화 한국인의 양산으로 민족통일 의지는 쇠퇴하여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우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이지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국민은 이 나라에 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민심이반으로 망국으로 직결될 것이다. 자국민을 무시하는 모든 역차별을 시정하고 결혼 이민자를 우대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 성숙된 자세로 한국어교육, 문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동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국민 우선정책(외국인 차별정책이 아님)을 쓰지 않게 되면 의식 있는 양질의 국민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며 다문화정책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건강한 내일을 어렵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히 여길 때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동운명체로서 국민 된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철저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곳에 한정하되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강성노조의 활동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노조의 활동에도 합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다문화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온 몸에 급속도로 퍼지도록 언론과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불순한 세력의 강력한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 호는 침몰되어 가는 줄 모르고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다문화라는 악성바이러스를 퇴치할 강력한 주사를 맞아 치

료해야 할 절박하고도 긴박한 시점에 우리는 서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양기호,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도서출판 논현, 2010.

엄한진, 『다문화 사회론(이민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성찰적 입문서)』, 소화, 2011.

웬디 브라운, 이승철 옮김, 『관용(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2010.

최병두, 『다문화 공생(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2011.

추병완,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리더』, 대교, 2011.

2. 논문

최석환, 「세계화 시대의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 다문화적 어프로치와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교 학위논문』, 2004, pp.1-12.

박용준, 「Bernard Malamud와 다문화주의 : the assistant와 the tenants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학위논문』, 1996, pp.1-93.

Abstract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Ethnic Liquidation

Cho, Dong-Hwan

1.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Policy by Korean Government

It is natural to interchang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s manpower or migrant women for marriage in global village era.

As a result of continual decrease in production by birth-contro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since Korean war in 1950s till 1994, we found it serious problem that we have less manpower in factories or less spouse for marriage caused by son preference trend in traditional society.

About 20-30 years ago government officials for national healthcare tried to distribute Condom on roads that we should have two babies only for each home and then bring them up wealthier. Especially it came to the greatest critical problem that it is not easy to find men wanting to work in dirty, dangerous, difficult workshops.

Therefore, government attempted to accept foreign workers from overseas.

In addition to this reason, Korean men in rural area or low-incomers in urban area felt not easy to find their spouses for marriage because almost all the people made efforts to bear boys only thru sex check in hospital illegally that they made sure boys only succeeds their genealogical trends in tradition.

The unbalance between male and female made them to look for their wives in overseas such Vietnam, China ,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 Etc.

Subsequently so many alien workers and women gathered to Korea to make money, as they found ideal world to collect money a month enough to amount of finance for a year or 2 years in their own countries.

With all the way to Korea they can do is the best way to make money.

Therefore, we find alien people from foreign countries total 1,400,000 including workers and immigrant women of marriage.

As we know, Korean society is much more conservative and lived as an ethnic people for about 5,000 years and they feel not familiar to different skin color such as white, black, dark, etc. They often have committed crimes in Korea as

illegal immigrant or fake marriage.

Korean people are suffering everyday by foreigners' crimes and they cant find jobs because of cheap wages for alien workers competitiveness to domestic workers.

But the prices of daily necessities goes up but their income is not raising relating with prices for living.

Korean government do all the way to proceed toward the multi-culturalism policy despite the declaration by English premier Cameron, French prime minister Sarkozy, and German premier Merkel that they failed in multiculturalism.

All mass medias such newspapers, TV, radios, internet news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have instilled multiculturalism in people's mind to accept foreigners not to discriminate, especially those who are sympathetic people to poor people.

This is brain-washing method by mass media everyday and Korean prime minister declared that our society has already reached to multi-society already with no people's consent regarding multiculturalism.

2. The Interrelations with All Aspects

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national security. As we see, we have failed in integration of society for about 1,352 years since the unified kingdom. we have been in a serious situation confrontation against war-like north Korea support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ussian power eager to find non-freezing seaport with all possible ways they can do.

In the south of Korea, Japan have continuously insisted that eastern Islet "Dokdo" away from 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belongs to Japan stubbornly for the purpose to re-occupy Korea again since they had no way to surrender to USA in 1945 with atomic bombs falling on Hiroshima and Nagasaki of Japan. And we also discover that mixed descenden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 immigrants with different culture will be increased geometrically day by day and we are sure that it is not easy to see pure Korean in 30 years later in Korea. Mixed Korean descendents with no or less Korean identity will not need to unify with north Koreans in one country

As time passes, Korea will be divided in two parts permanently.

In other way of viewpoint, in case of war in Korea or big problem in disaster, riots, revolution, etc, I wonder if they try to make devotion or sacrifices

for Korean. The motive or purpose to come to Korea is to make money. It is their main reason.

We can't expect any kind of devotion or sacrifices from them for Korea and Korean peninsula.

I am sure that they will run away from Korea as soon as some problem around them will be occurred.

We can foresee that we will have suicide bombing in Seoul downtown, by maybe more than 130,000 Muslims. According to world fact book by CIA in 2007, Muslim attempt to disguise peaceful attitude but when they gather to 5% of total population, they usually make voluntary organization of terrorism.

As we have seen, multi-culturalism in Korea will be prepared new problems for perishment.

Social security related to foreigners crimes. According to police agency's data for foreigners crime, there is 5,000 gangsters(65 groups) in Korea.

In 2008, Kang su hyon, 13 year old Korean girl student in Yangju in Gyeonggi province, attempted to rape her and kill her with knife. Her body showed to stab her body 13 parts with knife to death. She was so lovely girl to her single mom.

Kim sora, 17 year-old girl in Whasung city in Gyeonggi province was killed by Bangladesh man who married to Korea woman to marry with the purpose to get nationality for making money. But human rights centers has never stated any kind of sympathetic statement to her death as a woman or human being. Day by day foreigners crimes become violently, atrocity .

Last April 1 they brought about brutal murder in Suwon city, capital city of Gyeonggi province, away 50 kms south of Seoul. A Chinese worker- U wen chun(42) kidnapped a woman(28) and tried to rape and kill her and cut her body with knife separating her body from her bones into 280 pieces of fresh and put them in 14 black vinyl equally 20 fresh. His one room was put sharpener tool for knife in her bathroom and he owned 4 cellphone as a poor worker. We suspect him as human fresh seller in China with other evidences such burned bone in his yard,(not sure if it is human or animal) We have the biggest problem that most of mass media tend not to report any kind of foreigners' crimes under the slogan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We are sure that the freedom of press in Korea has been shunk and distorted from the beginning of Lee myong-bak government.

So many Korean people have been tamed and educated not to complain about foreigner's wrong-doing and government officials also have been hesitated to treat foreigners problem such as crimes and malpractices at any case if it not serious problem clearly. Therefore so many Korean people have been suffering related with foreigners, especially some areas such as Ahnsan city, Daelim-dong, Garibong-dong in Seoul, southern-east part of Korea.

Identity problem related with foreigners. We foresee that mixed Koreans, 2nd or 3th generations naturalized immigrants will be lost or decreased the Korean identity day by day which Korean ancestors have kept and sustained Korean dignity, territorial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thru the sacrifices and devotion such blood, tears ,and sweat. As time passes, the more descendants of 2nd or 3th generations increased, the less the desire for unification shall be lost. It means eternal separated countr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e have no way to support ethnic liquidation which express it in other word-multi-culturalism. We also expect that Korean people will be disappeared on earth when wrong policy - multi-culturalism -will be kept by government.

3. Multi-culturalism in Advanced Countries

English prime minister-Cameron declared that we failed in multi-culturalism. French premier Sarkosy and Merkel of Germany also declared that they failed in multi-culturalism. And so many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so much because of multi-culturalism and blocked foreigners from overseas to protect their people from job opportunities, crimes, etc. Despite of these facts, Korean government has sustained stubbornly multi-culturalism against national interests of Korea to support big enterprises such as Samsung, LG, etc which want to adopt them with cheap wages related to Korean nationals in working hours(foreign workers work for 12 hours but Korean work for average 8 hours a day in factory). Almost everyda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ivic group supported with financial basis used to open all kinds of activities such as immigrants play, song contests, etc.

Korean government spend so much money for foreigner welfare but they reduced or removed so money for the welfare of Korean domestic people such disabled, low-income citizens. It is reverse discrimination.

In case of war, calamities in Korea, alien workers will stay and join at the unhappy accidents at those cases in future. The main purpose to stay in Korea

is to make money by foreign workers. I am sure that almost all the foreign workers in Korea will run away from Korea to their own countries at those cases. We don't understand why stupid government continue to preserve multi-culturalism against Korean people. We know that they were instilled by biggest enterprises such as Samsung group, LG, etc who can be beneficial to their businesses. Multi-culturalism is a policy killing Korean people for the purpose of business interests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에 대한 토론문

강진구 (중앙대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연구교수)

1. 조동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발표는 우리에게 현재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다문화주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반다문화주의’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는 그동안 온라인상이나 언론의 단편적인 언급 등으로만 학계에 전달되었던 ‘반다문화주의’를 학문적 담론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다문화와 관련하여 더욱 풍부한 논의들을 생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경청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선생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 선생님의 발표를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중국에는 한민족의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제기함에 있어 합리적 추론이나 구체적인 논거보다는 특정대상(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을 비롯한 무슬림, 혼혈인)에 대한 고정된 편견과 거기에서 비롯된 과장, 그리고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담론화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견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3. 선생님의 발표에 등장하는 외국인(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결같이 국익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생님께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발표문에서 선생님께서는 ‘국제결혼’을 가부장적 지배질서의 영향으로 인한 남아선호(여아의 부족으로 인한 남녀의 성비 불균형)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농어촌과 도시서민이 “혼처를 찾아 국제결혼을 강요받는 형국”이 진정으로 남녀의 성비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의 희망, 욕망)

5. 선생님께서는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자’라는 큰 틀의 도식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자’라는 논의의 근거가 부족(실정법 위반)해 보이며,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가 된 다양한 원인들과 귀책사유 등을 따지지 않고, 추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6. 선생님의 발표문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만들어 졌으며 그것도 “8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거나 현재 혼인생활중이라 하더라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불안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불행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 훼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문화 정책을 폐지하고,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혼혈인이 차별받으니 아버지의 나라로 가라고 했듯 가정이 해체되면 이들도 어머니의 나라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7. 선생님과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에 대한 토론문

김점영 (외국인 노동자 대책 범 국민연대 사무총장)

조동환 선생님께서는 현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국민들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작태들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하여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의 견해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의 폐해와 문제점에는 무분별한 국제결혼현상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국적부여 기준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동환 대표님의 발표내용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여 제가 보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국제결혼 상담통계 발표 내용을 보면, 2011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는 22,265건으로 2010년도 26,274건에 비해 4,009건 줄었고, 2011년 한 해 동안 국제결혼 이혼상담 건수는 648건으로, 2010년 472건에 비해 37.3% 증가했으며 이혼 상담을 받은 부부 중 49.7%가 별거 중이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이 53.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이혼상담을 받는 외국인 아내가 32.1%에 달하며 또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 이혼 상담 사유로 아내의 가출이 32.1%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이미 별거중인 비율이 55.7%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통계수치는 이혼상담을 한 사례만을 자료화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국제결혼 가정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제결혼가정 중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한국남성과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인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굳이 처음부터 위장, 사기결혼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싶은데 한국으로 들어올 방법은 없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단 한국으로 들어 와서 결혼생활 보다는 바깥으로 나가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 결국 한국인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가출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2000여 곳에 이르고,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해외 현지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순진한 한국 남성들을 국제사기결혼의 희생자로 만드는 피해사태가 만연하도록, 이를 방치하고 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국제결혼을 미화하는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행태로 인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외국인 아내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은

하고 싶은데 한국으로 들어올 방법은 없고,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단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오고 보자 하는 욕구가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장삿속과 어울려 결국 사기결혼이나 위장결혼 등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고 또한 현재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든 2년만 채우고 보자 하는 심리로 2년 동안 같이 살다가 자녀를 볼모로 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경우 외국인이 자국인과 결혼해도 결혼만으로는 그 나라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인과 결혼하면 10년 동안 같이 살아야 일본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다문화정책'과 허술한 국적 부여 기준으로 인해 많은 한국 여성들이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무슬림들의 경우,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국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결혼해서 산지 2년만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다처제가 용인되는 무슬림 국가 출신의 경우 부인을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데, 본국에 부인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한국 여성과 결혼 후 2년 지나 국적 취득 후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본부인을 불러들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남아시아 무슬림들 사이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나아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애 여성이나 고령의 독신여성들을 노려라', '무조건 한국여성을 임신시켜라'라는 매뉴얼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한사람의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교묘히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한국인과 이혼하고 본국에서 배우자를 불러들여 그 배우자도 국적을 취득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체계를 우롱하며 이 땅에 한국인의 탈을 쓰고 무임승차하는 심각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많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보다 더 쉽게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 출신의 범법자들이 한국을 가장 만만한 불법 이주의 대상지로 손꼽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범죄자들의 국적세탁 경유지로 전락하여 국제적인 비난과 웃음거리가 될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다문화주의', 외국인 인권 운운 하며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와 국적부여 기준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범죄 조직이나 불량 외국인의 범죄로 희생되는 일이 일상화 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 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혼인 신고 후 2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 남발을 철저히 방지하고 위장결혼이나 사기 결혼으로 인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일본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10년 동안 같이

산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같이 사는 동안이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시에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외국인 배우자에게 재판에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부여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으면 이것을 빌미로 현재의 제도처럼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 취득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자녀가 있건 없건 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권이나 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10여만 명의 국제결혼 경험자나 국제사기결혼 피해자들은, 현재 2년 동안만 한국인과 결혼하여 동거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허술한 기준이 국제사기결혼, 위장결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2년을 10년으로 개정하고,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이나 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 출국의 대상으로 하는 관련 개정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적들에 관하여 조동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과 이주자 문제

아웅 틴 툰 (Aung Tin Htun)/이주민방송 MWTV 대표

I. 한국의 노동력문제

한국의 IT산업이 급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수단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특히 고학력 인재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3D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현장에는 젊은 노동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은 90년대부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한국의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정책은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이 있습니다.

II.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산업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는 일본의 기능실습제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기능실습제는 이주노동자에게 8개월 동안 노동현장에 대한 교육을 의무로 한 뒤, 16개월 동안 노동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게 하는 실습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완전히 판판입니다. 한국에 온 연수생은 단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바로 노동현장으로 보내집니다.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송출업체의 권한 아래에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산업기술을 배운다.'라는 명목으로 연수생을 불러 싼값에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사업장에 투입되어 언어적·문화적 이해 없이 노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기본생활·업무용 단어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위험한 일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임금문제, 퇴직금문제, 사업장이동문제 등 수많은 이주노동자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들과 노동계의 노동자들을 이어주는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 사회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의 인력 송출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송출업체는 여러 나라 노동부에 홍보해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송출업체의 허가 없이 처음 계약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이동이 제한되는 등 송출업체의 간섭을 받습니다.

또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노동부가 아니라 송출업체가 해결합니다.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노동자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고용주 중심으로만 해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문제를 일으킨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새로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고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부터 폐쇄되었습니다.

2. 고용허가제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허가(승인)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조차 복잡한 제도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기간이 끝나고 이어서 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비자 연장은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현장의 일이 바쁘다 보니 날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날짜를 놓치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좋은 사람이라서 노동부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마치고 잠시 고향에 다녀온 뒤 복직하기로 약속하고 노동자는 떠납니다. 고용주는 한 번 해고하면 복직이 안 되는 줄 모르고서 잠시 동안이지만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해고했다고 신청합니다. 노동자가 돌아와 복직하려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깐깐한 법대로 진행하는 일밖에 모릅니다. 복잡한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일어난 고용주나 노동자의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 벌금형 같은 융통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노동자를 복직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문제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은 총 3회까지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이런 규칙을 잘 모릅니다. 긴 시간 노동, 임금체불, 폭행, 저임금, 사업장의 부도, 불편함 등 여러 이유로 다른 회사로 이동하다가 제한되어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써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노동계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업종 별로 비자의 종류(제조업E-9-2, 건설업E-9-3, 농업E-9-4, 어업E-9-5 등)와 근무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멋대로 업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업종 변경 불가능 때문이기도 하고 각각 특징이 있어, 업종마다 특히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주로 중국동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들이 많아서 월급이 밀리는 일이 많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다니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 구제역 사건 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구제역으로 가축들이 매몰되고 일거리가 없어져 동시에 노동자들도 해고당했습니다. 축산농장들의 사정은 비슷비슷하고 축산업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농업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습니다. 봄·여름 농사를 시작할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겨울이 되면 노동력이 필요 없어 해고됩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농장을 찾아야 하지만 겨우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3개월 이내에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가 되는데 겨울을 지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어업은 애초에 근로계약에 일 년 동안 휴일이 고작 2일이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어업은 새벽 2시부터 오전 11-12시까지 그것도 바다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 또는 종사자 5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 된다.’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모가 작은 농업이나 어업의 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어, 사고가 났을 때 고용주나 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한국 어업 쪽에서는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한국고용주에게도 이주노동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혹은 고용주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종을 나누는 기준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보는 한국어능력 시험 점수입니다. 이게 또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에는 언어능력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농업이나 어업은 한국어 실력 우수자보다 실제로 농업·어업을 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점수로 통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좋은 일꾼을 구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의 여러 문제도 이런 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멋모르고 한국을 찾아오는 산재이주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산업안전공단 통계 2009년-5233명, 2010년-5599명)

3. 방문취업제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노동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와는 다르게 업종이나 사업장 이동 등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이 만이 이제도에 적용됩니다.

Ⅲ. 한국과 동남아시아

1. 한류 열풍으로 인한 코리안 드림

한류 열풍이 불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 상업 목적의 영상물 때문에, 많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희망의 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한류상품은 한국의 현실적인 모습 말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를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지만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교수, 변호사, 의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직업이면 본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부풀려진 한국 이미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더 편하고 안락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허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알지 못하고 한국 노동현장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좋은 소문만 듣고 한국에 와서 일하며 겪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기 위해서는 1-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빚을 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그를 향한 고향 가족들의 기대가 큼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암울한 현실을 겪고 한국인들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노동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 실상을 말해주어도, 환상에 젖어 있는 젊은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만 돈 많이 벌려는 것이냐'는 반응으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그들의 한국을 향한 열망은 한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외국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지 한국과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노동현실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 한국인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타국에 들어간다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처럼 열악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동남아시아의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같은 제도가 연결된다면 굳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2.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시선

이주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건 고용허가제 같은 부당한 제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는 자본주의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연간 GDP를 기준으로 빈부지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땅값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적인 자급자족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한국처럼 기업과 임금에 의존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땅이 풍요롭고 기후도 좋아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동남아시아는 GDP로 경제지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DP가 0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하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인 발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후진국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회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뿐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다들 고향에 자기 땅과 집이 있습니다. 먹을 것은 언제나 풍족하기 때문에 굶어죽을 걱정은 없고, 한국 사람들처럼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걱정 또한 없습니다. GDP가 낮고 후진국가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까닭은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결코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먹을 걱정하며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매우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취급하며 무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결혼 이주와 결혼소개업체들의 문제

결혼소개업체들은 동남아시아의 젊은 여성들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시켜서 한국에 입국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소개업체들은 곧잘 이주여성들을 속입니다. 여성들 역시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옵니다. 한국 남성들은 먼저 처가댁에 1-200만원을 주며 필요한 데 쓰시라는 식으로 혹하게 만듭니다. 그만한 돈이면 물가가 싼 동남아시아에서는 큰돈입니다.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이 그래도 꽤 잘 산다고 믿게 되지만, 한국에서 그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이고 여성들은 대부분 농촌 아저씨들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아파트를 상상하고 왔다가 시댁의 열악한 환경과 무시·핍박 등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도망가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들어오려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브로커들은 여성들에게 ‘진짜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물어봅니다. 도망가겠다는 여성들에게는 브로커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미리 그 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속은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또 브로커들은 신랑을 바꿔치기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고향에서 만나고 결혼을 하기로

했던 남성이 아니라 노총각이나 할아버지에게 넘겨지기도 합니다.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은 적게는 열 살, 많게는 삼십 살 넘는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한국 결혼소개업체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나 몰라라 하고 한국사회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제결혼 여성들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4. 다문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14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 50%인 70만 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다문화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이기에 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미 젊은이들이 부족한데 그들은 또 생활비, 양육비, 학비 등이 부담되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이 가지는 것을 꺼립니다. 공장이나 농촌에 일할 노동자는 부족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도 아닌데 3D업종에서 값싼 임금을 받으며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노동자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20-30대 청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한 몸의 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으로 기르기 위해 최소한 1억-2억 정도의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투자비용 없이 아시아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노동자로 쓸 수 있는 건 한국에게 큰 이익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아주 싼 임금으로 일 해주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산업발전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주민들 없이 한국의 산업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그 자리를 한국의 청년들이 메꿔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대학원까지 마친 한국 청년들은 그런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청년들이 돈 잘 버는 직장을 바란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생활을 하기에 도 턱없이 적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3D업종을 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일입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봅시다. 일본에서는 회사의 과장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급료는 한국 과장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두 배입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자리의 높낮이에 따라 버는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3D업종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도 바뀌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정책의 변화입니다. 3D업종은 꼭 필요한 일들인 만큼 무시가 아니라 기본 생활이 가능한 만큼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IV. 결론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이주민의 영향이 한국 산업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한국 사회도 동시에 더욱 빛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서로 이해하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어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의미 있는 사회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면 이해할 수 있고 제도를 개선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한국 미래의 이웃 같은 식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결혼을 통해 들어와 정착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도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국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식구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다문화라는 구별보다 따뜻한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한국의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과 이주자문제"에 대한 토론문

이성복 (다문화정책반대 전 운영자)

IT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3D업종입니까? 그 자리는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업종은 화공약품냄새와 금속성분의 유해가 가득한 업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업종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극히 소수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꺼려하는 업종입니다. 과거 외국에 우리근로자들이 나가 일한 것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근로자들은 그 나라의 일부지역에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서민들 일자리 구석구석을 잠식하고 있으며 그 범죄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요?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전후세대들이죠. 지금은 60이상 된 어르신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공단지역에서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채 겨우 먹고 살만큼만 임금을 받고 임금 인상 시위 한번하면 빨갱이로 몰려 가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식세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해 오신 분들이죠. 이제는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 그 2세대들은 뒷전이고 외국인이 돈 다 벌여 가는 웃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가 없어진다고요? 지금은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가 없어서 생활고로 하루 자살자가 35명이며 그 절반이 노인입니다.

외국에서 국민소득 2,000불미만의 저임금의 인력을 데려와 20,000불 수준의 자국민과 가격경쟁을 시켜놓고 일 안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임금이 오르면 가격경쟁이 없다? 예를 들어봅시다. 1,500cc자동차 가격이 1990년도와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상승 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임금도 배로 올랐습니까? 오히려 20~30%로 하락 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 한다면 반 토막 이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본만큼 납품단가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보게 되었고, 반면 대기업이 이윤을 보면 볼수록 빈부격차만 커지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출산이 재앙입니까? 고출산이 재앙입니까? 인구밀도 세계3위인 나라에서 저출산이 재앙이라고 괴벨스식 선동을 해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장난입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과 기술이지 저임금 노동력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머지않아 바닥이고 건강보험 적자도 위험수준인 나라가 마치 영국과 프랑스처럼 막강한

선진국인양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집니다.

저임금의 노동력만 늘어나면 이들의 막대한 복지기금을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의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국민 보호입니다. 서민들이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만 보답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도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출산율 낮다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라도 제대로 벌고 세금 꼬박 낼 수 있게 하면 그 많은 복지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또한 이미 주장한대로 밥도 굶지 않고 행복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며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폐단을 널리 알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자국민도 같이 살길입니다.

다문화란 원래 여러 민족·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국가에서 교육정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민국가의 공통점은 경찰력이 엄청 강하다는 것입니다. 시골 어르신들 치안센터에서 약주 드시고 큰소리 쳤다가는 치도곤 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냉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까?

다문화가 지구상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문화가 그렇게 좋은 것이면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 무수히 많은 소수국가들이 왜 독립을 했습니까? 중국도 티벳과 위구르족들이 독립을 원하지만 중국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세계적인 부유국 유고연방이 해체된 것도 불과 20년 전이며, 키르키스키탄의 두 민족간의 폭동도 1년도 채 되지 낳은 일이며, 수단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불과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민자들은 결코 동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사회가 잘 대해주고 퍼 주어도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동화될 마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프랑스 폭동을 보고도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더 잘해주고 퍼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시 이상과 현실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외국인 천만 명이면 ? 우리 아이들이 맘대로 밤거리를 다닐 수 있기는 하겠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간에 지역감정도 해결하지 못하고 막장으로 치닫는 국회를 보고도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과 화합이라니, 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천만 명이면 그 다수가 중국인일텐데 국적주고 영주권주면 선거권도? 그러면 중국계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데 나라 통째로 중국에게 넘겨주는 주장인가요?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소수 약자인 아동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법안은 타당에서

발의했다고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외국인 복지나 편의를 위한 발의에는 여야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 분위기는 무엇이며, 반다문화 운동가들을 외국인 혐오자로 몰아야만 고귀한 학자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교육자들은 뭐며, 외국인 정책본부 공무원은 외국인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들면 징계 사유가 되고, 다문화에 반기를 들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 이 분위기는 도대체 뭔가요?

언론의 다문화 찬양은 도를 넘어 일제의 내선일체 교육과 북한의 주체사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문제입니까?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려면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공중과 3사를 통해 찬반토론을 공정하게 한 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투표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과 이주자 문제"에 대한 토론문

최영진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아웅 틴 툰 선생님의 발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쟁점과 문제점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고용허가제로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노동 조건의 열악한 환경과 신분상의 불안함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편견의 문제 등은 비단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될 큰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하여 정부당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일반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 자체의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들이 처음 미국 사회에서 제기되었을 때, 그 담론의 운동적 확산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었던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들 자신이었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 동성애자, 여성 등 매우 다양한 집단들의 목소리는 백인 중심의 사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외쳐왔고, 그 결과 자신들이 누릴 권리를 조금씩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가령, 2003년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작하여 출시된 다큐멘터리 <스탑 크랙다운>에 보면 산업연수생 제도의 불합리성에 맞서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두 명의 이주 노동자(꼬빌과 비두)가 벌이는 힘겨운 싸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고용허가제로 전환된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내에서 벌이고 있는 자신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활동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구호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그 활동이 전개되어 온 현 시점에서 실제 이주 노동자 사회 내에서 그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며,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가 이 쟁점에 대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2주제

사회: 이춘복

주제: 반다문화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15:50-17:50)

정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 다문화현상의 문제점

신만섭 (프랑스 툴루즈 국립사회과학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1. 서론

1. 목적

본 논문은 한국 다문화 '현상'¹⁾(phenomenon)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한다. '비판적 고찰'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 없이, 법적으로는 헌법체계(constitutional system)를 위반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제대로 정의되지도, 공인되지도 않은 다문화(multi-culturalism)라는 용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골간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도 쉽고 무책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 소수의 주류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s)들이 국민여론을 '다문화'라는 일방향으로 몰고가는 한편, '반다문화'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왜곡하는데 대해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비판적 고찰' 이유다. '반다문화' 용어 자체가 "주류에 반대하는 소수세력"이라는 낙인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 용어는 수정함이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많은 토론회와 많은 세미나가 있었지만 찬성론자 일색이었을 뿐 제대로 된 다문화 반대토론이 없었다는 사실이 고찰의 마지막 이유다. 論(discuss)한다는 것은 찬과 반, 명제와 반명제가 부딪혀 합의 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반대토론 없는 간담회 수준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다문화 관련 토론회, 공청회 주최측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 있고 생산적인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현상과 이민 도입은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사건이며 따라서 이는 정치권이 국가적 중요의제로 삼아 시간을 두고 주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역사학자, 미학자와 기업연구소가 이론들을 도입하고 언론의 일방적 대국민 여론조성과 함께 종교인, 사회단체와 기업인이 실무역할을 하며, 정

1) '현상'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다문화 선도자들이 '다문화'의 외면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방향을 오도하여 본질을 드러내게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쓴 것이다 - 위키피디아 '현상' 용어풀이 참조.

치권은 나중에 이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이며 나라의 중대사와 장래를 망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한국 소수 주류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다문화를 빙자한 다민족 다인종화를 이 땅에 이식시키고자 함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²⁾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주의자들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포스트주의³⁾(postism)’을 앞세우고 있으나, 정치적인 변수와 국제관계의 흐름이 다민족화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부재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정치적 변수가 다민족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며, 이를 고려치 않는 정부, 재계, 사회단체, 학계, 언론의 일방통행식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고를 촉구하고자 한다.

2. 범위

본 논문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상관관계를 다루고자 하며, 단일민족의 정치적 개념, 국가·국민·주권·정체성의 개념과 다민족화의 관계, 세계다민족 국가의 실태 파악과 이것이 한국의 다민족화 추진에 주는 시사점, 다민족화에 대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수를 검토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내 다문화주의자들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3. 본 논제에 대한 역대 연구상황

다문화를 논함에 있어 기존의 자료, 보고서, 논문은 지원정책, 행정시스템 검토, 사회 문화적 고찰 등 미시적인 부분이 압도적인 수로 많았던 반면, 유독 정치적 시각으로 본 다문화 현상에 대한 고찰은 찾기가 힘들다. 특히 다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정치적 결정이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시각보다도 정치영역에서의 다문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 문화 행정 등 다른 모든 영역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 작업이다.

4. 방법론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자들이 해왔던 기존의 주장과 이론을 반박하는 형식이 주

2) 다문화주의자들이 정책 도입 초기에 ‘다민족 다문화’란 용어를 썼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주자’라는 용어를 붙여 그들을 이 땅에 정주시키려는 적극적 태도, 정부의 이민행정 개편과 지원, 국적관련법의 급진적 완화 현상, 대학부설연구소·기업연구소에서 나오는 다문화 관련 보고서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3) 포스트주의(postism) : 탈(脫) 또는 후기 근대주의. 학술적으로는 주로 서구 지성을 이끌어온 데카르트 이후의 이성 중시, 기계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20세기에 나온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불확정성 등 물리학 이론이 철학과 사회학에 영향을 주어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 나오면서 탈민족, 탈국가라는 정치적 해체이론에도 영향을 주었다.

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장 근거인 인용문이 자주 등장하며 이에 대한 반박과 설명이 전개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와 도표도 도입될 것이다.

5. 특수용어 정의

본 논문에서 다문화 지지, 또는 옹호자를 표현할 때 편의상 ‘다문화주의자’로, 다문화주의자들이 ‘반다문화주의자’로 지칭하는 세력은 ‘다문화반대자’로 용어를 통일한다.

II. 본론

1. 정치적 현실주의와 다문화 이상주의

글로벌리즘(세계화) 이데올로기는 ‘세계화’를 공식적으로 주창한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외쳐지고 있는 국가정책 슬로건이다. 이를 다문화에 연결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세계화는 휴대전화 팔아먹는 시장이 세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며, 그 가운데에는 사람의 피가 섞여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⁴⁾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려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⁵⁾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 “다문화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⁶⁾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연구소와 언론의 발언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로 인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외국인과의 공존을 통해 글로벌시민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점”⁷⁾

“다문화 사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로 향하는 필수 관문이다. 글로벌 코리아는 경제 규모만 커졌다고, 번듯한 국제행사를 많이 치렀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의식과 규범을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열린 사고다.”⁸⁾

4) 조선일보 2006. 5. 25,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5) 아시아 투데이 2012. 4. 27, 이명박 대통령 다문화 관련 발언 중에서

6)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 4. 18, 김황식 국무총리 발언 중에서

7) 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2010. 5. 19

글로벌리즘과 다문화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갑작스럽고 급진적이라고 규정해도 무방한 한국 다문화 정책의 추진배경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사실 위의 인용문들은 다문화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성 레토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본질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덕수)총리는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이 한국사회의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미래지향적인 다문화·개방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내실 있는 대책 추진을 당부함”⁹⁾

전문가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다문화사회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글로벌시장으로 한창 뻗어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만 상충되지 않는다면 다른 인종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것이다.¹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 한국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6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인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인력 수급차질과 세수감소를 초래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

출산율 제고, 유희인력 활용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 2010~2040년에는 1985년 이전 출생한 高출산 세대가 50대 중반에 진입하고 저출산 세대(1986년 이후 출생)는 30대에 진입해 출산율을 제고하더라도 향후 30년간은 과거 저출산의 충격이 불가피. 2020년까지 70만~140만명의 노동인력 수급불일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¹¹⁾

위에서 보듯이 경제적 현실 제고가 다문화를 밀어붙이는 근본배경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리즘은 경제적 절대명제이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한국의 보수의 논리다. 정부와 기업, 언론의 다문화 행보는 경제적 현실에 다민족 이상주의를 결합시키려는 것이다. 진보의 경우는 이런 배경 논리마저 부실하다. 세계 시민연대, 휴머니스트 글로벌 네트워크와 같은 이상주의, 정치적 낭만주의 선에서 머문다.

경제적 목표의 정당화 또는 ‘휴머니즘’적 가치를 위해 내세우는 다문화주의자들의 다음과 같은 이상주의에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인가?

8) 세계일보 사설, 2012.4.19, 다문화 낙제점 받고 ‘글로벌 코리아’로 갈 수 있나

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 총리, “이민자 지원 강화로 다문화사회 본격 대응”, 2007. 4. 20

10) 한국경제, 신동열, 다문화사회 문턱 넘은 한국... 관용의 미덕 보여야

11) 삼성경제연구소, 위와 같음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케 하는 이념체계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시행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다.”¹²⁾

“글로벌시대에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으로 갈 때 상대의 고귀한 문화적 유산과 이중언어 같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 민족 종교의 벽을 넘어 다양성이 융화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¹³⁾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¹⁴⁾

2. 다문화주의자들의 국가·국민·주권 개념 혼란에 대한 비판

다문화주의자들의 위와 같은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제기되어야 할 논점은 첫째, 국가 국민 주권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다. 이것은 다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문화를 남발함으로써 개념의 혼동과 모호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국가는 “확정된 영토(delimited and determined territory)를 보유하며, 그 소속감을 가진 국민(nation delimited by a sense of belonging)들로 구성되고, 대내외적 주권행사를 위해 정치 사법적 기구를 가진 메카니즘”이다.¹⁵⁾ 국가 개념과 연관된 국민(nation)은 불특정 사람(population)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에 소속 정체성을 가진 사람¹⁶⁾이며, 주권은 영토 또는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권위(입법, 사법, 행정권)를 행사하는 대내외 배타적 권리다. 설사 글로벌리즘을 외치는 그 어떤 나라도 이 개념들을 포기한 예는 아직 없다. 따라서 글로벌리즘과 다문화 개념을 국가 틀에 아무

12) 윤영미, 한국적 다문화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 다문화정책포럼(PORUM) 주최, 2008년도 기획세미나 자료집, 새 정부의 다문화 정책 : 과제와 방향2008. 3. 19, p10.

13) 한국일보 2011. 5. 13, 이윤범, 다문화사회를 위해

14)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0. 5. 6,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발언 중에서

15) Wikipedia 사전(불어판) Etat(국가)의 정의에서 인용

16) 헌법에 나오는 ‘민족’이 글로벌리즘과 다문화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람’으로 바꾸자는 국회의원도 있다. ‘사람’이란 용어는 그와 연관된 국가·주권에 대한 定義와 법개념에 완전 상충하는 것으로 이는 온정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는 게 놀랍다.

렇게나 섞어 그 본질을 허무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지구촌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공존의 ‘다문화, 국경을 허물다’ “국경선을 강조하지 않는(강조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의 동료의식은 바로 세계시민의 식이다” 라는 논조가 그것이다. 더욱이 헌법과 국가 수호의 제일선에 있는 최고지도자마저 공개석상에서 국가체제의 필수 3요소를 허무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 사람인데, 옛날 조상이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¹⁷⁾

한국은 개념 설정과 명확한 선긋기에 약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상적 사조나 조류를 국민에게 전파·확산시키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절차과정을 생략한 채, 국가내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박정희 정권을 비난해 온 ‘민주’정권들이 경제개발 5개년식 맞춤형 플랜과 파시즘을 방불하는 전체주의식 사회총동원체제를 답습한다. 일방통행형 국민캠페인과 일사불란한 행정작업을 통해 조기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행태가 그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그 단적인 예다.¹⁸⁾ 게다가 공적 성격과 함께 불편부당과 객관성이 기본인 공공 기관과 언론이 대국민 캠페인에 감성적 온정주의를 홍보매개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는 국가체제 유지의 근본 성격을 망각하거나 무지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뒤탈이 나고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안은 다르지만, 시대의 트렌드처럼 번지는 한국 다문화현상에서 다음 인용문이 오버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1980년대의 한국 진보는 거대 담론이 판치는 곳이었다. 민족해방(NL)과 민주민주(PD), 민족민주(ND) 또는 사회주의 같은 용어를 일상어로 달고 살 정도였고 그래야만 요즘 말로 ‘개념 있는’ 인물로 대접받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그 거대 담론의 시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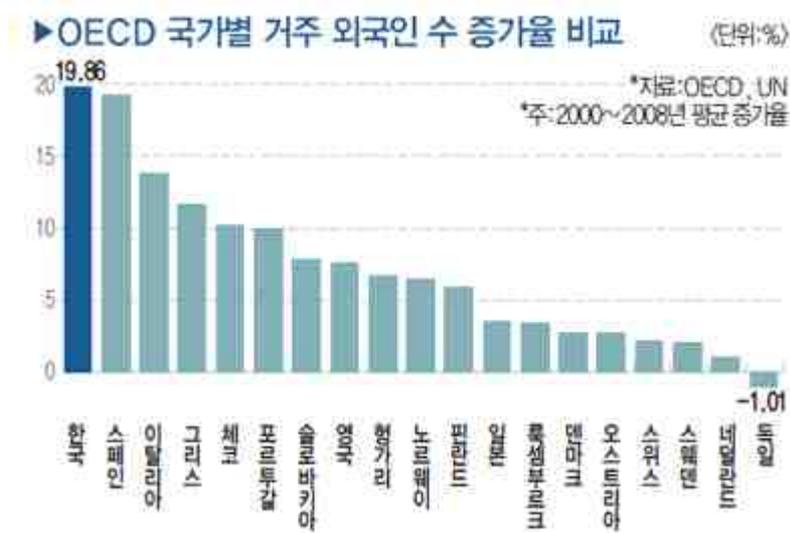
다문화 도입 여부는 국가와 국민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마느냐하는 때

17) 아시아투데이 2012. 4.27, 이명박 대통령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단 연수회’ 참석 발언 중에서,

18) 다민족 다문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맞춤형 플랜을 진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상 다민족 국가들이 형성된 계기는 네 가지다 : 전쟁을 통한 타민족 정복, 식민지하에서 강제이주, 기후변화, 기근과 종교 박해로 인한 인구집단 및 민족이동, 왕정시대의 정략결혼과 정치적 타협(특히 유럽에서)으로 인한 영토변경 등이다. 즉 이들의 다민족화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오랜 역사과정에서 누적된 자연 지층이다. 반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개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서 인위적으로, 그것도 단기간 내에 일종의 ‘기획상품’을 완성하겠다는 모양새다.

19) 프레시안 2012. 4. 20, 정승일,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를 고발한다!

우 중요한 국가의제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적 토론과 동의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니 정책자체가 급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민족주의를 절대 확고한 국가적 신조로서 국민에게 뿌리내리게 했던 정부와 사회 주류들이, 태도를 일시에 돌변하여 민족주의 해체와 다문화 만능을 외쳐대는 이 행태야말로, 한국사회의 국가 삼요소에 대한 개념 숙고가 부재하다는 증거다. 극단과 극단을 빠르게 오가는 시계추의 진자운동식 정책돌변과 여론몰이 속에서 국민들이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3. 다문화의 사회 분열적 요소

다문화주의자들의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제기되어야 할 두 번째 논점은, 다문화의 사회 분열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다문화주의자들의 개념선택 경솔함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의 부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문화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높이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단기노동력 유입 등 소극적 인력수급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이민자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문호개방으로 양질의 인력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이민자를 主流사회에 적응시키는 동화주의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 동화정책의 목적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主流문화로 단일화하는것인 반면, 다문화정책의 목적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동화정책은 이민자를 동화시키기 어렵고, 설령 동화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까지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主流의 문화로 녹아드는 ‘용광로(Melting Pot)’보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샐러드그릇(Salad Bowl)’을 지향”²⁰⁾

“다문화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엔 다양한 인종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는 포용의 철학이 깔려있다. 소수 이민족들이 자국의 문화에 흡수되기를 강요하는 동화주의(Assimil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는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의 미덕이 근본이다. 다문화주의 정착은 국가의 위상과 품격도 높인다.”²¹⁾

정치적으로 ‘통합’(integration)은 매우 중요한 단어다. 정치권은 국가공동체, 국민,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며 중시한다. 국민적 통합은 동의(consent)를 통한 정체성 확립이 전제된다. 동의는 특정국가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한 국가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민족구성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반기를 들거나 폭동이 일어나고 민족간 권력투쟁의 원인이 되며 여의치 않으면 따로 분리독립 하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게 지구상 수많은 다민족 국가 실상이다. 한 국가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약속이 그리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왜일까?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 역사, 언어를 초월하는 국가적 통합 이념과 사상의 부재 때문이다. 즉 국가와 국민 정체성의 부재 때문이다. 다민족 국가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 루소의 사회계약론²²⁾이고 그 실천이념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나온 국민국가(nation-State) 개념이다. 유럽의 다민족 국가들이 이념을 통해 통합에 일정부분 성공했다. 그러나 잠재적 분열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다.²³⁾ 분열(fracture)이란 단어에 대해 강박증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다.²⁴⁾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 공화국 출범이후 전혀 문제가 없다. 왜인가? 단일민족이란 국민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물학적, 인류학적 기원은 부차적인 문제다. 오히려 그걸 따지고 들며 단일민족을 부정하기 위해 - 그것도 최근 들어 갑자기 다문화 이데올로기의 안티테제로 삼기 위해 - 근거도 부실한 상고대 유전학적 기원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주장이야말로 축자적 해석에 사로잡힌 원리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²⁵⁾ 한국정부 출범 초기, 비록 이념적으로는 침예한 이견이 있었

20) 삼성경제연구소, 위와 같음

21) 한국경제 2011. 12. 16, 신동열 공존의 ‘다문화’...국경을 허물다

22) 루소(J.J.Rousseau)가 말한 ‘특수의지’(particular will)의 ‘일반의지(general will)’로의 수렴행위가 그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의사(general will)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몸으로 받아들인다.” - 루소, 사회계약론 p21, 이환譯,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3) 유럽 각국의 소수민족들은 무장분리독립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안의 서로 다른 민족들이 정치적으로 분리독립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24) 프랑스의 경우, 헌법 1조에 “프랑스는 분리되지 않는(indivisible) (...) 공화국이다”, 2조에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못 박은 이유를 새겨보라.

25) 다문화주의자들이 한국의 단일민족성을 애써 부정하려 들지만 같은 논지를 펴는 언론마저 한국민의 유전적 일체성이 세계 다른 국민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한국

지만 한국민은 같은 민족구성원이라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었으며 오히려 강한 공교함까지 보여주었다. 정치사상적 이념으로 갈등했지만 민족적으로는 분열과 분리주의는커녕 오히려 단합을 추구했다. 즉 한국에서는 민족이 곧바로 국민으로 전환되는 동의(political consent)과정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견 지구상 많은 국가들 가운데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런 특수성²⁶⁾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용어와 개념을 면밀한 검토와 여과도 없이 수입하여 국가 중대사를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지적 풍토와 국가시스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의 지식인들과 여론선도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글로벌리즘, 다문화라는 - 그것도 흐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 - 세계의 유행과 트렌드에 맞춰 이 나라를 급진적으로 재단하려 할 게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분석하여 방향설정을 하는 독자적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²⁷⁾

국민적 동의도 없이 다민족화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선택을 논하면서 가장 급진적인 후자로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다문화주의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방향설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²⁸⁾ 한 국가안에서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 역사, 종교, 언어 등 고유성 인정이 ‘다양성’이란 미학적 단어로 이상화될 때 동반될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²⁹⁾ 지역갈등과 남북분단이 미해결된 채 다문화변수까지 이 땅에 첨가되어 혼재될 때 생길 정체성의 분열과 정치적 난마에 대한 고민은 엿볼 수가 없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오버할 정도로 다문화를 향해 앞만 보고 폭주할 것이 아니라 옆나라 중국이나 일본이 왜 일민족 추구정책으로 일관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은 유전적으로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민족이 유전적으로 단일민족은 아니지만 두 종류(북방계와 남방계)만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198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누가 진짜 프랑스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정통 프랑스인은 부모와 조부모, 즉 3대가 모두 프랑스인인 경우를 의미했다. 그런데 호구 조사는 전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 프랑스 정부가 호구 조사를 통해 프랑스인을 가린 결과 이 기준에 맞는 프랑스인들은 겨우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면 단 두 갈래의 유전적 흐름만 갖고 있는 한민족은 세계에서 드문 매우 집약적인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조선일보 2009. 1. 9.

26) 프랑스는 자국의 독자성, 고유성, 특수성을 *exception française*(French exception)로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단어만 다를 뿐 자국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27)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던 80년대 후반에 한국의 진보지식인들과 운동권 대학생들은 그 사회모델에 천착하며 열정을 바치고 있었다.

28) 각주 20) 참조

29) 다민족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민족 · 종교간 갈등과 사회적 불만으로 인한 폭동과 테러, 정치적 자치영역 요구, 더 나아가 분리독립 요구와 이를 목표로 한 무장투쟁 등이다. 국민국가 개념을 정립한 원조의 나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사태를 겪고 있다. 90년대 유고연방의 해체과정에서 일어난 민족간 유혈전쟁은 2차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민족간 분리사태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라 할 수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영국식민지 시절 차 재배 노동력 충원을 위해 인도 남부의 타밀족 일부가 강제이주해온 이후, 원주민 싱할라족과 30년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상 다민족 국가 중 대다수가 갈등, 폭동, 테러, 분리운동을 겪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4.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변수를 통해 본 다문화 비판

다문화주의자들의 이상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제기되어야 할 세 번째 논점은,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민족 국가에서 민족간 소요, 폭동, 또는 특정민족의 자치요구,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날 경우, 해당 국가 내부의 사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민족 원적국 또는 강대국의 외교·군사적 개입을 불러오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2008년 그루지야 내 자치지역인 남오세티아·압하지야 지원을 위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³⁰⁾, 유고연방의 분리독립 내전 당시 나토(NATO)의 개입, 2011년 리비아 다민족내전 당시 유럽 주요국의 개입, 인도의 소수민족 분리주의자에 대한 중국의 지원³¹⁾ 등 이루어야 할 수 없다.

한반도는 4대강국에 둘러싸여 지정학적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분단마저 되어 있어 국제정치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정국가에 대해 주변국들이 쓰는 전통적인 전략이 “분리해서 통치”(divide and rule) 하는 것이다. 대상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존법칙은 그 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게 당연하다.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말이다. 이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의 속성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위적 귀결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검역’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수입산 용어 ‘해체주의’ ‘포스트주의’와 경제우선 논리에 천착하면서 다민족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 악조건에, 분단이라는 악조건이 더해진 상태에서 한국이 다민족화된다면 국가 구성원의 통일 의지는 흐려질테고 이웃나라의 개입과 분열조장을 쉽게 만들어 중국에는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정학적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분단고착형 다문화 정책에 쓰는 에너지를 남북통일과 북방진출에 쏟는 것이 옳은 방향 설정이고, 그것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 바꿔 말하면 한국이 다민족화될 경우, 지정학적 악조건 때문에 주변국의 간섭 기회를 더 주어 분열을 초래하는 등 자신을 스스로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³²⁾

30) 그루지야의 러시아계 자치지역인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가 독립을 하려하자 그루지야 정부가 무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통합하려 했으나 러시아가 군사개입하여 그루지야가 굴복, 결국 두 자치지역에 대해 러시아가 독립승인했다.

31) 인도 아삼주에 소재한 최대 반정부 무장단체 ‘아삼통일해방전선(ULFA)’이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확보됐다고 인도지 힌두스탄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ULFA는 지난 20년 간 인도 북동부 아삼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와 또 다른 분리주의 단체인 보로랜드국가민주전선의 테러 활동으로 적어도 1만 명의 인도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 SOH 회망지성 국제방송, 2010. 3. 21. -

32) “민족주의적 안목으로 자기 역사를 보는 것은 당연하죠. 중국과 일본, 미국·영국·프랑스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남북통일도 이를 수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 한국학 연구자 중 한명인 존 덩컨(John Duncan·64)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는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좋지 않은 동네’인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민족주의를 버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09. 12. 16. -

5. 세계경제 변수를 통해 본 다문화 비판

마지막 논점은 다문화주의자들이 세계경제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는 탈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는 반이민, 외국인체류자 엄격관리 및 본국 송환 강력조치 등이 대세를 이루고 유럽국 각 정부조차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개방적이었던 원조 이민국가 미국조차 이전과는 다른 강경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³³⁾ 한국은 세계경제위기라는 흐름에 무색하게도, ‘글로벌 다문화’를 외치대며 ‘글로벌리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다문화 이데올로기를 전국가적으로, 그것도 일방통행식으로 과급시키며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대량유입을 추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세계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거시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경우, 실물경제 추락에 이은 고용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의 복지비용과 사회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대량 유입된 이민자, 체류·정주 외국인에 대한 비용 가중까지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대량 이민자 유입 상태에서, 급작스런 한반도 격변으로 인해 북한의 2천만 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경제·사회적 비용은 정부의 감내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설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는 것은 경제·사회정책 논리상 자연스런 수순이다. 한국만이 과다 기회비용 초래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거스르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사회과학적 대안이 아니라 온정주의적인 주장과 상대방에 대해 메카시즘 형태의 자극적 비난만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 노동력, 출산율과 경제적 불황 출구 찾기 등 경제적 성장동력이 문제라면, 한국이 지금 취해야 할 정책은 외노자, 이민자 유입이 아니라 전향적인 남북교류와 북방정책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³⁴⁾ 같은 언어·문화를 가진 양질의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재건 등 성장동력원, 철도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간 물류 대혁명의 원천이 북방에 있기 때문이다.

33) 유럽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국가지도자의 다문화 실패 공식선언, 미국의 이민자 추방센터 건립과 연방주마다 반이민법 제정 등 서구국가들의 외국인 정책은 ‘유입 억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美 대규모 ‘이민자 추방센터’ 건립 추진 논란, 연합뉴스 2012. 1. 24. / 미국인 대부분 반이민법 찬성, 라디오 코리아 2010. 8. 4. / 애리조나, 조지아 주 반이민법 제정, 뉴시스 2011. 5. 14

34) 독일의 1871년 통일이 1830년대 관세동맹을 통해 각 영방들의 경제교류에서 돌파구를 찾았듯이 말이다.

III. 결론

이민국가의 필요조건은 첫째, 영토가 넓어야 한다. 둘째, 인구가 적어야 한다. 셋째, 식량 생산이 풍부해야 한다. 넷째, 지정학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 한국은 이 네 가지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이민 부적합국가다.(아래 그림 참조)

또한 국민 64%가 다문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보다는 정부가 설정한 다문화 노선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을 더욱 압박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혈통을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1000억원에 가까운 다문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³⁶⁾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는 진상에 대한 명확한 조사 지시 대신 국민을 혼내고 질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는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서는 안 되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³⁷⁾

언론 또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선 보도 은폐·축소·왜곡의 경향이 강하다.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보는 식자층들은 우리 국민이 글로벌의식이 아직 덜 깬 수준 미달 존재,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안되면 다그치고 회초리라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다문화 반대론자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제노포비아와 파시즘인데 다문화주의자들의 낙인찍기식 비난, 국민동의과정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여론확산, 정책강행이야말로 다문화 메카시즘과 다문화 파시즘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다문화 의제는 사회 경제 문화적 현안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다. 한국의 다문화 논의는 그동안 이를 무시·배제하고 경제인, 종교인과 인문학자들 위주의 논의생산만을 계속해왔다. 이는 논의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불합리한 동시에 국민적 합의 도출 없는 국가중요의제 방향설정은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국가의 모든 지원 체제를 총동원하여 무리하게 벌이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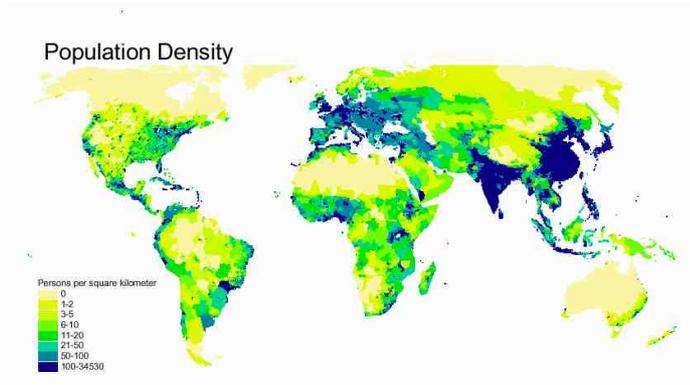
35) 18일 여성가족부가 GH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19~74세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다양한 종교·인종·문화가 공존하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매일경제 2012. 4. 19.

36) 매일경제, 위와 같음

37) 동아일보 2012. 4. 19.

국의 다문화정책이 세계조류에 역행하고 있으며 시대트렌드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는 인식의 부재가 이미 우려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이다.

OECD 국가별 곡물 자급률 (2005년, 한국-2006년)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 4. 1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7. 4. 20

박준, 이동원, 최홍,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 5. 19.

윤영미, 한국적 다문화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 다문화정책포럼(PORUM) 주최, 2008년도 기획세미나 자료집, 새정부의 다문화 정책 : 과제와 방향 2008. 3. 19,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이환譯,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Wikipedia 사전(불어판)

D. Schnapper, La communauté des citoyens, Gallimard, 1987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프랑스 헌법)

언론매체 :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프레시안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뉴시스 라디오코리아 SOH국제방송

"정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다문화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남해경 (시대소리뉴스대표 / 한국문화전략연구소장)

시대소리는 한국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 및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를 다루고 전파한 핵심적인 칼럼중심 인터넷언론이며, 문제를 특히 정치적인 시각을 중심에 놓고 다각적으로 풀어낸 언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시대소리를 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심만섭 박사는 바로 시대소리가 강조한 정치적 시각에 입각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작동하는 문화현상에 대해 아무도 경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시각이란 대내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정당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인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국의 타국에 대한 전략적 의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시각을 말합니다.

심만섭 박사가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글로벌리즘의 필수성, 이를 위한 다문화 수용의 불가피성이라는 논리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때 핵심적인 논리는 경제와 생산입니다. 특히 저출산시대 노동인력수급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권논의가 결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과연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다문화주의에 어떠한 의도적 함정이 있는 지에 대하여 전혀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소리가 소위 원칙과 정치사상적 기조에 의해 운영된 언론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시대소리의 사상에 대하여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민족, 좌익, 우익 등에 대한 논리를 담고 있는데, 다문화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정치와 관련하여 시대소리가 전개한 언론운동은 다양하지만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대소리는 몸통정치라는 말을 만든 언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대소리는 보수와 우익을 구분한 최초의 언론이었습니다.

몸통정치는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고 이영희선생의 표현을 날개정치라 이해하고 이를 비유하여 몸통정치라 하였습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전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영희 선생의 '날개정치'는 빨갱이로 상징되는 공안정치시대에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유입니다. 말하자면 좌우의 균형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시대소리는 날개의 균형정치에 대해 몸통의 구심정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 세계에서 몸통은 무엇인가요? 몸통은 국민 + 민족을 말한다. 국민은 민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구성의 인적 단위를 완성합니다. 말하자면 몸통은 국민+민족이며, 양 날개는 좌익과 우익입니다.

몸통을 민족과 국민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는데, 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공동체는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은 생물학적 차원 및 문화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공동체의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기구와 구분하여 국가공동체라 하는 것이며, 근대 이전에 국가는 바로 인적집단의 결합으로서 국민과 동일시되었습니다.(Body Politique) 소위 영토국가는 근대에 와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러한 성격전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은 뜻밖에도 많지 않습니다.

몸통 = 국민 + 민족 에서... 민족은 개개의 인민 (people)이 새로이 국민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 문화적 자원입니다. 민족은 마치 일제하 처럼 정치적 형태를 갖지 못할 때에도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언어만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핏줄, 꿈과 희망, 삶의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운명공동체로서 그 자체로 삶의 가장 포괄적인 단위입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에만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죽은자와 주역으로 살고 있는 자, 그리고 주역이 될 자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약속이 파기된다면 민족은 파열되고 약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과 전통의 공동체가 사라진 곳은 대신 조직과 돈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물려받은 모든 생물학적 기질과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상실하고 모든 의미상관도 상실한 채 별거벗은 채 몸뚱아리만 남은 “자연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국민은 바로 그러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민족 속에서 자라나온 정치적 결사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러한 국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의 자식들은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국가를 국가기구로 그 의미를 폄하하였습니다만 국가는 생물학적 문화적 역사적 공동체임과 동시에 정치공동체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국가기구와 같다면 도대체 헌법은 무엇을 단위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국가기제라 부르든 정부라 부르든 국가기구라 부르든 이런 것들은 국가공동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와 공화주의 (republicanism)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만 전자는 마치 이등박문이 제안한 것처럼 중앙정치 없는 자치주의나 선동하고 있고, 후자는 중앙일보가 선동하였던 것처럼 남북분리를 위한 대한민국주의 제창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를 써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 결과가 바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정

치적 수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국가공동체의 기반이 된 민족공동체 및 민족 독립운동세력와의 절연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음모의 소산입니다.

다문화는 경제와 사해동포주의의 명분을 내걸고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민족 및 국가전복 쿠데타입니다. 여기에는 좌도 우도 없습니다. 보수는 경제를 내걸고, 진보는 인권을 내걸며 민족공동체와 국민공동체(국가공동체)를 협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소리가 내건 몸통정치의 파괴를 통하여 민족을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국민을 정치적으로 해체하고 벌거벗은 고독한 대중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연인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권력카르텔과 자본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다문화가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좌우와 호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시다만 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최근 보수는 신보수라는 용어를 추가하였던바 이제 신보수는 신자유주의적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보수는 시대소리가 말한 몸통을 가리키는 말로 삼아야 하고, 신보수는 우익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수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전통, 국가와 민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습시다만 이제는 민족과 국가, 전통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분리되고, 자유민주주의 또한 자유(경제적 자유주의)와 민주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유의 범주에 인권과 기독교 그리고 미국의 신연방구상의 기본단위인 한미 FTA를 중심에 놓고 남한단독의 국가주의를 완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구한 것은 미국의 오래된 전략이지만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네오콘이 그 핵심이고 그 한국지부로 정치목사들이 판을 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급조되어 만들어진 바 있고, 소망교회를 육보이는 사이비 장로 이명박 정권의 집권기반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 박근혜의 대립구도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실에 기반한 것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내거는 박근혜씨가 상대적으로 보수에 기울어져 있다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명박씨는 우익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씨가 몸통에 가깝다면 이명박씨는 신자유주의적 우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가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통이나 국가 그리고 민족의 가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정성도 올바른 인식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문화만 보더라도 박근혜씨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필리핀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에게 생활권이상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세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2020년이면 강원도만큼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긴다며 노무현정권 시절 다문화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다문화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형식으로 전개된 바 있습니다. 농

촌총각이 장가를 못가는 것은 도·농간 격차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시정해야 할 사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보정권이 벌인 일은 새로운 인종을 도입하여 혼혈인들을 중심으로 자파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신부가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 시달린 그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에 동정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공동체 그 기반이 되는 민족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큰 질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살다 간 많은 영령들과의 무언의 약속을 내 썩개친 일입니다. 앞으로 주역이 될 세대들에게 부당하게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일입니다. 진보는 사회동포주의적 박애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사회동포주의를 위해 왜 혼혈실험까지 일부러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중학생에 이른 아이들에게도 혹독한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그들의 경제적 곤궁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그들 수백 명을 구제한다고 나라 전체를 영망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ODA자금을 대량 늘려서 필리핀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스리랑카에, 나아가 아프리카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현지인들이 문화적 갈등을 겪지 않고도 자국내에서 취업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국의 기업들은 그곳에 값싸고 친한국적인 생산기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도 농촌으로 시집가는 여자들에게 금융지원, 교육비 지원, 문화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시집갈 여자들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표만을 의식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ms)은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에게 이론적 실천적 빛을 지고 있는데, 그는 영연방의 캐나다에서 프랑스인들이 개척한 퀘벡주를 독립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스스로 그 당수를 지낸 바 이는 프랑스 민족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말은 반민족주의, 민족해체주의운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다문화주의는 제국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개별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지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전개할 그런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비용상으로도 정치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는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족이 자동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의 침입에 시달린 민족입니다. 반대로 다민족국가가 평화적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오히려 수많

은 침략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다민족국가가 평화적이라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문화는 정치실종 속에서 벌어지는 코미디 문화현상으로서 수많은 지적 인 착각과 미신에 입각한 민족파괴, 국가파괴 운동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 다문화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유숙란 (숙명여대 연구교수)

I. 용어와 관련하여

1) 다문화현상과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이민이 증가하면서, 단일민족, 단일 사회로 인식되었던 사회가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현상을 현재 '다문화 현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 종족, 종교, 문화, 젠더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다양성을 문화적인 차이로만 읽어내는 '다문화 현상'이라는 말은 중립적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영국과 미국은 이민자 문제를 '인종 관계' 중심으로 보았고, 1980년대 네덜란드는 '소수 집단'(ethnic minorities) 문제로 규정하였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주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사회구성 양태가 달라지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사회'로 지칭할 때, 이러한 용어가 어떤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다문화사회를 다양한 인종, 종족으로 구성된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규정하였지만(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집단 간 다양성을 문화 간의 차이로 보겠다는 '다문화주의'의 인식을 내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한국에 어느 정도 적절한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소수 집단(혹은 소수 민족)의 문화적 권리, 집단 대표권, 및 집단적 권리와 관련된 이념과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엄한진(2011)의 주장과 같이 다문화주의를 논의할 맥락이 없다. 이러한 부적절성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논할 때 다문화주의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있다.³⁸⁾ 정부가 2006년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선언하였지만, 다문화주의 정책(multiculturalism policy)을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포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다문화정책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통합정책이 다문화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고,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내용을 정책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돈은 이민과 관련하여 나타난 다양한 사회현상을 '다문화'로 지칭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이러한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을 논할 때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 왜곡된 다문화주의' 혹은 자의적으로 규정된 다문화주의(김원 2011; 이병렬 외 2011),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엄한진 2011; 이선옥 2007; 김원 2011), 한국적 다문화주의(윤인진 2011), 다문화현상을 나타내는 '서술적 의미로서의 다문화주의'(김남국 2008).

고 본다.

2) 다문화정책: ‘이민정책’과 ‘통합정책’

이민정책은 국경의 관리와 관련된 영역이며, 통합정책은 현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용되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는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정책의 중점은 이민정책보다는 통합정책에 있다. 그러나 ‘통합정책’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민정책’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영역의 이민을 허용하는 경우, 그 논리는 ‘국가 정체성’보다는 ‘국가 이익’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 초반까지 독일이 채택한 “초청노동자 정책”과 2000년 고숙련 노동자(IT 전문가)를 도입하는 “Green Card 제도”는 모두 국익에 기반한 이민정책이다. 초청노동자정책은 중공업과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에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시하였으며, 그린카드 제도는 첨단산업에서 IT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시한 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가 후퇴하여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와 같이 이민정책은 국내의 경제적 필요성이나,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성(국제결혼제도의 장려 등)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들어올 때 이들 가족 동반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통합정책과 연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다. 1950~60년대 프랑스는 초청노동자와 동반 가족의 정착을 허용했지만, 독일, 스위스 등은 엄격한 순환정책과 최소한의 정착만을 허용하였다. 독일이 2000년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할 때도 처음에는 가족 동반은 허용하지 않으려 했으나, 인권단체의 비난과 과거 초청노동자 정책을 실시했을 때의 실패를 교훈삼아, 나중에 변경하였다고 한다(Hollifield 2004).

이민정책이 국내 경기와 밀접히 관련이 있고, 국내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유입이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통합정책은 주로 보편적 인권 규범(국제인권협약 등)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즉 통합정책은 이미 국내 들어와서 다양한 이유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비국민인 이민자를 거주하는 사회 공동체에 통합하여 내국인과 거의 차이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미 들어와서 정착한 이민자에게 시민권(시민적 권리,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의 일부 권리를 부여하여 이들을 사회에 제한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왜냐하면 시민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나오지만, 시민권의 일부(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보편적 인권에

서 나오는 것으로도 보기 때문에, 비국민에게도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범과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 거주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는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통합정책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민정책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민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민 영역에서 국가 주권과 국익이 정책 수립의 기본 원리로 작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와 연결된 통합정책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민정책과 이에 대한 논의는 약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민자의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민자의 유입과 범위, 정착 등에 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 본다.

II. 국가와 주권, 국민 개념과 관련하여

1) 초국적 시민권을 실현하는 주체는 국가

Soysal(1994)은 과거 1970~90년대 유럽지역에서 초청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거주국의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시민권'(national citizenship) 개념 대신 '탈국가 멤버십'(post-national membership)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민자 등 비국민은 거주국의 국가 시민권은 없지만, 이들은 인간으로서 소속되고 있다고 전제되는 '초국적 공동체'(transnational community)의 소속원으로서 탈국가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탈국가 멤버십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초국적 공동체의 탈국가 멤버십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주는 주체는 국민국가(nation-state)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즉 초국적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인권을 비국민에게 허용하더라도, 그 인권은 이주자가 거주하는 지리적인 '국가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그 실현 여부는 개별 국가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

다문화/통합정책의 영역을 시민적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으로 나눈다면, 다문화정책의 주 초점은 이민자의 '시민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에 있다. '정치적 통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적 통합의 핵심 내용은 선거권인데 선거권은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가 귀화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중앙수준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은 향유할 수 없다.

다문화 정책/통합정책에서 주장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내용은 인간으로서 보편적 인권은 국민 비국민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된다는 논리에서 나

은 것이며, 이러한 보편적 인권에 정치적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안에 거주하는 비국민에게 정치적 권리(중앙수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국가와 국민 정체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3) 이민과 국가

Hollifield는 이민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국가는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민을 제한해야 하는 딜레마(자유주의의 역설: liberal paradox)에 봉착한다고 설명한다. “이민이 증가하면 국내 사회의 구성 양태가 변화하게 되고, 국가 공동체는 위협을 느끼며 이민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이민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며, 국가 내에, 그리고 국가 간 갈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Hollifield 2004, 887).

이러한 딜레마는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을 국익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원칙 위에서 수립해야 하는 개별 국가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자유주의 경제 질서, 이민과 초국적 공동체, 보편적 인권의 추구 속에서도, 국익, 안보, 국가 주권, 시민권 등을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국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Hollifield 2008).

참고문헌

- 김남국. 2008.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사회』통권 80호.
- 김원. 2011. “한국 이주민 지원 단체는 ‘다문화주의적’인가: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35집 1호. pp. 71-100.
- 윤인진. 201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과제,”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발표자료집. 2011. 5. 31.
- 엄한진. 2011. 『다문화사회론』 소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 이병렬·김희자. 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사회』여름호. 통권 90호.
- 이선옥. 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아카데미.
- Hollifield, J.F. 2004. "The Emerging Migration State."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8(3). pp.885-912.
- Hollifield, J. F, 2008.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How Can We

"Bring the State Back In"?" in Brettell, Caroline B. and J. F. Hollifield. ed. *Migration Theory*. Routledge: New York. pp.183-237.

Soysal, Y.N.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차이와 배제의 공포 -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타자를 중심으로

이명현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전담교수)

1. 서론

구미호와 같은 요괴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요괴는 인간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인간 주체의 불안이나 공포, 욕망, 충동 등이 투사된 존재라 할 수 있다.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의 표현처럼 요괴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요괴를 만들어 낸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과 같다.¹⁾

구미호는 문학과 영상서사에서 인간과 대조되는 경계 밖의 존재, 즉 타자로서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재현되어 왔다.²⁾ 이렇게 구미호가 공포의 요괴로 형상화되는 과정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 인간의 삶이 자연세계와 분리되면서 세계를 객관화시키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사건이나 세계의 경이로움을 접했을 때 자연 대상을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적대자로 인식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세계로 인식할 수 없는 경계 밖의 존재에 대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을 투사하여 요괴로 만든다.³⁾ 따라서 요괴는 인간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요소인 흉측한 외모, 파괴적인 성향, 유혹과 파멸, 변신의 능력, 모호한 정체 등의 속성을 가진다.

구미호의 요괴로서의 성격은 그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상상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이 구미호를 요괴로 규정했는지, 과연 구미호는 인간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인지, 구미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미호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된 최근의 영상 서사물은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을 확장하거나 전복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과 구미호를 어떠한 방식

1)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박전열 역, 『일본의 요괴학 연구』, 민속원, 2009, 16쪽.

2)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에서 구미호에 대한 긍정적 관념이 드러나는 이야기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구미호를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이야기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다.(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이명현, 「이물교혼담에 나타난 여자요괴의 양상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우리문학연구』 21, 2007, 참조.)

3) 이명현,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천년여우 여우비>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8-3, 문학과 영상학회, 2007, 191쪽 참조.

으로 재해석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⁴⁾

본고에서는 최근 구미호를 재해석한 작품 중 <구미호 여우누이뎐>⁵⁾을 대상으로 인간과 구미호,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공포를 유발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드(Robin Wood)는 ‘억압된 것/타자’라는 이중적 개념 쌍이 공포영화의 괴물(요괴)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주장한다.⁶⁾ 공포영화에서 괴물(요괴)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경계를 의문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당대 문화에서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치, 자질, 특성 등을 일그러지고 흉측한 형태로 재현한다는 점, 이차적으로는 괴물과 정상으로 간주되는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경계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는 점이 그렇다.⁷⁾

따라서 <여우누이>의 구미호를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문화적으로 억압한 가치를 찾는 과정이며,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를 한국사회의 주체와 타자의 메타포로 확장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이와 배제의 문제’에 도달하고자 한다.

II. 억압된 타자로 재현된 구미호

전래되는 구미호 이야기에서 구미호는 인간을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고, 특히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부정적 아니마로 나타난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구미호의 유혹을 이기고 구미호를 인간 세계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인간에게 구미호는 공존과 어울림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퇴치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파악하면서부터 구미호는 주체에 대한 타자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구미호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요괴이며,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⁸⁾

구미호의 요괴로서의 성격은 공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傳說의 故郷>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⁹⁾ <傳說의 故郷>의 구미호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남편(인간 남자)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만다. 시청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구미호가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오싹한 공포를 느끼고, 남자의 배신으로 사람이 되

4)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공포 스릴러에 재현된 구미호만을 대상으로 하고, 구미호를 판타지의 대상으로 재현된 작품은 제외하기로 한다.

5) 논의의 편의 상 앞으로 드라마 명칭은 <여우누이>로 표기함.

6)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Bill Nichols(ed), 『Movies and Methods II』, Berkeley: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7)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여귀로 읽는 한국공포영화사』, 책세상, 2008, 64쪽.

8) 이명현,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천년여우 여우비>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8-3, 문학과 영상학회, 2007, 195쪽.

9) <傳說의 故郷>에 나타난 구미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명현, 「<傳說의 故郷>에 나타난 구미호이야기의 확장과 변주」,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참조.

기 직전에 실패하는 장면에서는 애잔한 슬픔을 공유한다. 그러나 공중제비를 돌면서 구미호로 변신하고 인간을 유혹하며 간을 취하는 정형화된 구미호의 모습은 공포를 유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2008년 새롭게 단장한 <傳說의 故鄉>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구미호>를 방영하였다. <구미호>에는 인간에 의한 구미호 감별과 살해가 나타난다.¹⁰⁾ 문중의 공모에 의한 구미호 살해는 표면적으로 집안의 수치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들이 욕망하는 것은 구미호의 내단과 간이다. 문중의 남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구미호를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해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딸, 자신의 누이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추구한 것이다. 2008년 <傳說의 故鄉> 구미호는 우리 내부에서 태어난 존재이다. 구미호에 대한 설정이 경계 저편에서 인간 세계로 진입하는 요괴에서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우리 내부의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여우누이>는 기존의 구미호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설정을 통해 인간과 요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여우누이>는 구미호의 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고, 구미호와 윤두수, 양부인, 조현감 등과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추악함을 드러내는 한편, 상대적으로 구미호인 구산택을 인간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기존의 구미호 캐릭터에 변화를 주고 있다.¹¹⁾

<여우누이>는 기존의 <傳說의 故鄉> <구미호>의 뒷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구미호는 인간이 되기 위해 오랜 세월을 인고하지만 결국 인간에 배신당하고 인간 세계를 떠난다. <여우누이>는 바로 이 지점부터 출발한다. 그때 구미호에게 인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면 구미호와 아이는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시작이다.

구미호: 너는 여우의 피와 사람이 피가 섞여 있어, 어딜 가나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몸이다. 하여 이 어미와 함께 맹수들이 들끓는 산중에서 살 수가 없다. 석 달 후 네가 열 살이 되면, 완전한 여우가 될 것이니, 그 때, 어미가 널 데리러 오마. (1회 S#8)

구미호는 남편이 금기를 어긴 후 집을 떠나면서 딸을 인간 세상에 머무르게 하려고 한다. 구미호의 딸 연이는 여우와 인간의 피가 섞여 있어 완전한 구미호로 각성하기 전에는 맹수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연이에게 안전한 곳만은 아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대부분의 인간들은 연이를 적대하고 죽이려

10)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이씨 문중은 구미호를 배신한 남성의 아들로부터 이어온 집안이다. 이씨 문중은 여식에게 구미호의 피가 발현되는 저주를 안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딸이 초경을 맞이하면 구미호 감별의식을 실시한다. 구미호로 판정된 여아는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집안의 남성들에게 넘겨져 살해당한다.

11) 박영우. 「창작소재의 콘텐츠 활성화 방안—구미호 설화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0, 2011, 128-149쪽.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이가 자신이 반인반수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겪는 연이 내부의 문제도 있다. 연이는 지금껏 어머니를 인간으로 알고 인간 사회에서 커 왔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한 외형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구미호: 게다가 누가 널 보기라도 하면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누가 널 발견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발 연아...!

연이: (다짜고짜) 어머니! 저는 괴물입니까?

구미호: (놀라) 뭐라고? 괴물이라니? 당치도 않다? 니가 어찌 괴물이란 말이냐?

연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한다면서요? 제 모습을 보십시오. 털이 나고 귀가 뾰족하게 변했습니다. 괴물이 아니면 어찌... (3회 S#75)

구미호를 쫓는 퇴마사가 구미호 모녀를 의심하고 연이에게 호랑이 뺨가루를 뿌린다. 호랑이 뺨가루는 요괴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효능을 가진 비약으로 연이는 귀가 뾰족해지고 털이 난 반인반수의 모습을 드러낸다. 연이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숲 속의 나무 위로 도망친다. 외형적 차이는 연이의 정체성 혼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이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구미호는 연이의 정체가 발각되기 전에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돌아오도록 소의 생간을 먹으라고 다그친다.



그러나 연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괴물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연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기준이 내면화되어 있어 주체와 다른 타자의 징표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구미호는 인간이 구획지어 놓은 인간과 구미호의 경계에서 자유롭다. 1회의 구미호와 퇴마사가 대결하는 장면에서 퇴마사는 ‘요망한 것! 짐승과 인간의 경계가 분명하거늘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려 드는 게냐?’며 호통 친다. 구미호는 코웃음 치며 ‘금수만도 못한 인간은 어찌하고?’라며 퇴마사를 공격한다. 구미호는 인간을 경험하면서 인간과 구미호의 외형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가치와 삶의 방식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구미호가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인간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혈연을 통해 이어오는 지속적인 차별과 억압이다. 12회에서 초옥으로 빙의된 연이는 어머니가 구미호인 것을 목격한다. 연이는 어머니와 자신이 같은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게 되고 ‘어머니도 저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던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라며 울먹인다. 연이는 ‘그럼 어머니의 어머니도’ 구미호였는지 물어보고, 구미호는 ‘어미의 어머니도 여우’였음을 이야기 해준다. 이것은 <여우누이>에서 구미호는 모계 혈연으로 이어지며 여우와 인간 모두에게 배제된 타자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우누이>가 다른 구미호 소재 드라마와 차별되는 것은 ‘구미호의 사람되기’가 중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구미호 딸 살해와 어미의 복수가 주된 갈등이라는 점이다. 구미호는 남편이 자살하자 딸 연이를 데리고 인간 세상을 떠돈다. 구미호와 딸 연이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윤두수 집에 정착한다. 윤두수가 구미호 모녀를 거둔 것은 자신의 딸 초옥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초옥은 백약이 소용없는 괴병을 앓고 있다. 윤두수와 양부인은 초옥이 점점 위독해지자 박수무당 만신을 찾는다. 만신은 초옥과 같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태어난 아이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비방을 알려준다. 구미호의 딸 연이가 바로 비방의 대상이다.

초옥은 윤두수와 양부인 사이의 유일한 혈육이다. 초옥의 생명이 위독한 것은 윤씨 가문으로 상징되는 주체의 혈연적 계승이 단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윤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자인 구미호와 딸을 살해하려고 한다. 윤두수가 주체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타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지라르(R. Girard)는 인간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문명을 영위하는 바탕에 희생제의가 작용한다고 본다. 집단의 혼란상태, 위기상태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인간 내면에 잠재한 폭력욕망을 모두 희생양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정화를 이루고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¹²⁾ 즉, 희생양은 주체가 집단의 가치(혹은 이익)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 개인(혹은 특정 소수자 집단)을 타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따라서 희생양은 타자화된 존재만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 정상의 범주에 들지 않는 존재,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 남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자질을 지닌 사람만이 희생양으로 지목된다. 왕이나 이방인, 여성은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너무 선한 성품도 희생양의 자질이 된다. 어린이나 처녀 역시 인신 공희의 제물로 적합하다. 그들은 아직 정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온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¹³⁾ 연이가 초옥이를 살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은 여우와 인간 모두에게 배제된 타자이자 아직 구미호로 각성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여우누이>에서 구미호는 타자이기 때문에 강요된 희생양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여우누이>에서 구미호는 타자이자 희생양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윤두수가 연이를 살해한 이후 구미호는 주체의 내부로 귀환하여 윤씨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수한다. 구미호는 기억을 상실한 척하고 윤두수를 유혹하고, 윤두수와 양부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조현감을 이용하여 윤씨 가문을 몰락하게 한다.

구미호가 윤씨 가문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보면 구미호는 공포와 매혹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 두려움과 매혹이라는 양가감정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갈등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 양가감정을 치유하려면 그중 사회적으로 억

12) 지라르(R. Girard), 김진식 역, 『희생양』, 1998, 203-217쪽 참조.

13) 오세정·조현우,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 이숲, 2010, 136~137쪽.

압이 더 심한 가치를 억압해야 한다.¹⁴⁾ 윤두수에게 구미호는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매력적인 여인이자 자신에게 딸을 살해당한 피해자이다. 윤두수가 자신이 살해한 아이의 어미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라는 금기를 위반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매혹적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두수의 욕망은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구미호라는 타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공포의 실마리가 된다. 윤두수는 구미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악을 상기하게 되고, 죄의식을 덮어버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부인의 충동’이라는 자기합리화를 꾀한다. 이 과정에서 윤두수는 더욱 더 구미호에게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체의 내부는 분열과 균열이 발생한다.

<여우누이>에서 구미호가 보여주는 매혹과 공포는 주체를 억압하는 가치가 매력적이면서 불안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소수자에 대한 위반의 욕망과 주체가 억압한 타자의 귀환이라는 공포가 구미호라는 존재에 복합적으로 투사되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Ⅲ.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다문화적 독해

<여우누이>에는 구미호가 인간의 간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다른 존재의 간을 탐한다.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자신의 딸을 위해 연이를 살해하는 윤두수나 욕망에 물든 인간의 간을 먹으며 불사의 괴물이 된 만신은 과연 누가 요괴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인간과 요괴의 관계 설정은 ‘인간-선, 요괴-악’의 정형화된 이분법적 사고를 전복시킨다.

윤두수: 왜 괴수라 하니, 기분이 나쁜 것이냐? 너도 저 년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혹, 저 년의 진면목을 알면서도... 아직도 흠모하는 것이냐? 괴수라도 좋단 말이냐? (비웃는다)

천우: 내 눈엔 나으리가 괴수로 보입니다. 연이 아씨를 죽인 나으리가 바로 괴수입니다!(16회 S#34)

위의 인용문처럼 인간과 요괴를 나누는 기준은 외형적 요인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인간다움이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남의 딸을 죽이는 인간과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성애를 가진 구미호 중에서 과연 누가 인간다운가 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니라서 박해와 고통을 받는 구미호가 오히려 인간적이고, 인간이라 자부하는 우리들이 이기적인 탐욕에 물들어 타인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요괴인 것이다.

14)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여귀로 읽는 한국공포영화사』, 책세상, 2008, 38쪽.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요괴가 되는 시발점은 인간을 기준으로 타자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체가 타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타자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양부인: (매섭게) 너는 니 새끼를 죽였지만, 난 내 새끼를 지켰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초옥이를 지킬 것이다.

구미호: (엎드려 영영 운다) ...

양부인: (일어선다) 알아들었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어미로서 양심이 있다 면... 나가 자결이라도 하란 말이다!(10회 S#34)

양부인 : 딱해서 못 보겠구나. 날 칠성판 위에 묶었던 그 기세는 다 어디 갔느냐? 주체님께 날뛰다 꼴 좋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흉측한 괴수 주체에 감히 인간 행세를 하다니! 한 순간이지만 네 딸년에게 동정심을 품었던 내 자신이 다 우습구나! 네 딸년은 또 어떤 흉측한 모습을 지녔느냐? (찌푸리며) 결국 우리 초옥이가 니 딸년 같은 괴물의 간을 먹은 것이 아니냐? 허니 집안이 한 시라도 편할 리가 있었겠느냐? (고개 저으며) 어찌 골라도 이리 골랐는지...(14회 S#37)

10회에서 양부인은 구미호에게 ‘나는 내 나이를 지켰고, 너는 네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나는 어미로서 책임을 다했고 너는 어미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양부인은 자식과 사회에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아이를 학대하고, 살인을 부추기며, 그 살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자인 구미호를 음해하고 짓밟고 모욕한다. 이것은 왜곡되고 이기적인 자식사랑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¹⁵⁾

양부인은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살인행위를 정당화한다. 심지어 구미호에게 ‘자결이나 하라.’며 모욕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정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지만 양부인의 자식 사랑에는 뒤튼린 욕망이 감추어져 있다. 나(주체)의 자식 사랑만이 중요하고, 남(타자)의 자식 사랑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양부인의 사고는 주체의 목적을 위해 타자를 수단화하는 것이다. 양부인에게 모정은 자신만의 가치이고, 구미호의 모정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아래 인용문처럼 ‘괴물의 간’을 자신의 딸에게 먹인 것을 걱정한다. 이것은 주체가 타자에게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심각한 폭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우누이>에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구미호가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구미호가 요괴로 지목 당해 박해받는 이유를 주체와 타자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12회를 보

15) 조수진, 「드라마로 보는 공정사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 드라마 "구미호 여우누이"와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0호,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53~56쪽 참조.

면 구미호가 죽은 딸 연이를 살리기 위해 초혼 의식을 하다 퇴마사에게 방해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구미호가 결국 퇴마사를 물리치지만 초옥이의 혼을 내쫓지는 못한다. 구미호는 망연자실하여 ‘대체 나와 연이가 너희 인간들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죄를 지은 쪽은 오히려 너희 인간들 아니더냐?’고 소리치는데, 이 때 만신이 나타나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래의 대사를 주고받는다.

만신 : 너희가 왜 박해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진정 모른단 말이나? 너희는(단호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구미호 : (기가 막힌다)

만신 : 나와 니 새끼는 인간과 다르다. (냉정하게) 그게 이유다!

구미호 : (떨리는) 고작 그 이유로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내 새끼한테 그리 한 것이냐? 인간이란 그런 것이냐? 자신과 다르다 해서 찢고 찌르고 죽여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족속이란 말이나?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새끼를 잡아 그리 처참하게 짓밟은 것이냐? (12회 S#40)

만신의 대사는 결국 구미호란 존재 자체, 즉 주체인 인간과의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체인 인간과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구미호는 요괴일 수밖에 없다는 단정적 사고를 유발한다. 다르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누군가가 다른 대상을 차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한다.¹⁶⁾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강조하여 구별과 배제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주체와 타자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문화권력 내지 사회적 체계모니의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¹⁷⁾ 그런 의미에서 타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라마 안에서 재현되는 구미호의 타자성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은 구미호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다. 대부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미호는 애초부터 인간세계를 벗어난 ‘인간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세계 안으로 들어오고자 애쓰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를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 볼 때, 구미호의 존재는 현재 한국사회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외부세력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좀 더 확대해석 할 경우 새로운 외부세력에 대한 거부감의 무의식적 표현일 수도 있다.¹⁸⁾

16)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008, 33쪽.

17) 사이드는 제국과 식민의 관계를 무력이나 경제적인 방식이 아닌 권력의 언어적 징후를 통해 분석한다. 그는 무력에 기반 한 권력의 원천보다는 권력의 과정과 전략, 다시 말해 지적인 방법과 언명의 기술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작용들이 모두 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Edward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18) 조수진, 「드라마로 보는 공정사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 드라마 "구미호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타자 배제는 나의 존재와 존재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데서 비롯된다.¹⁹⁾ 이러한 타자 배제는 나 이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아론적 경향이다.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타자에 대한 수용성, 즉 감성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타자를 자기 안으로 동화시키거나 통합함이 없이 타자를 수용하면서 타자로 향해 가는 열망과 초월의 움직임에서 인간은 유아론을 벗어나 타자와 화해하고 사회적·윤리적으로 관계맺음이 가능해진다.²⁰⁾

주체가 타자를 수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주체는 차이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안드레아 샴프리니는 “차이만이 이루어내는 분리·혼합·결합의 효과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사고도, 감각도 상상할 수 없다. 차이는 언제나 논리적·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에 선행한다.”고 하였다.²¹⁾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다르게 사유’하는 것만이 외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변화와 발전을 추동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²²⁾ 그러나 정부 정책은 소수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이주민을 대한민국이라는 경계 안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의 하나의 가족, 단일한 운명공동체로 통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 자체는 이질적 요소들로 혼종되고 있는데, 타자를 주체화하고 다양성을 배제하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오히려 주체와 타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수용과 변화를 통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우누이>에 재현된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를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체와 타자에 대한 상징적 은유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체가 순혈주의에 입각하여 타자를 배제하고, 주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면 타자는 주체의 공포로 귀환하게 된다. 주체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된 타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를 분열시키고,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공고히 할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주체가 우월하다는 오류를 인식하고, 주체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우누이>에서 연이와 정규 도령의 대화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연이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망설이다가 정규 도령에게 도련님과 다른 존재라고 고백한다. 비록 정규 도령은 연이가 반인반수인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정규 도령은 언덕 위 나무 위에 올라가

여우누이던”과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0호,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58쪽.

19) 강연안,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23쪽.

20)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14쪽.

21) 샴프리니(Andrea Samprini), 이산호·김휘택 역,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도서출판 경진, 2010, 196쪽.

22) 2011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인구의 2.7%인 139만 명이고 이 가운데 합법체류자는 122만 명, 불법 체류자는 16만여 명에 달한다.

절에 달린 연등을 바라본다. 발아래 보이는 색색의 연등은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다.

정규: 봐라! 저 등을 다 같은 한 사람이 달았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긴 몰라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달았을 거다. 하지만 저 등에 담겨있는 마음은 다 같다. (연이의 얼굴을 보며) 아끼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연이: (정규를 보는)

정규: 세상 사람이 다 다른 거 같아두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다.

연이 너랑 나두 신분은 달라두 서로 아끼는 마음은 같지 않느냐?

연이: ... 도련님.

정규: 그러니 우리는 달라도 같다. (4회 S#27)

서로 다른 연등 하나 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내는 장면은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체와 타자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타자를 수용하면서 자신에게 동화시키지 않고 타자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주체의 양보와 희생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가 연대한 확장된 공동체로의 진보인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여우누이>에 재현된 구미호의 모습과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여우누이>에서 구미호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자이며, 주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양으로 재현된다. 기존의 구미호를 소재로 한 공포물은 구미호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과 구미호가 무덤을 헤치며 시체를 파먹거나 인간의 간을 탐하는 장면을 통해 공포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여우누이>에서 구미호는 진한 모성애를 가진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로 표현되었고,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 스스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인 서스펜스를 유발하였다. 구미호의 모성애에 초점을 맞추며 그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그려내며 인간이 억압한 타자 구미호가 귀환하는 공포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여우누이>에는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가 전복되어 탐욕스러운 인간이 구미호의 간을 탐한다. 이러한 관계 변화를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문화 상황의 메타포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구미호를 단순히 전래되는 이야기 속의 요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혹은 주체에 대한 타자의 은유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확장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성찰하는 것이 구미호 이야기를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연안,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008.
- 박영우, 「창작소재의 콘텐츠 활성화 방안-구미호 설화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0, 2011.
-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여귀로 읽는 한국공포영화사』, 책세상, 2008.
- 오세정·조현우,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 이숲, 2010.
- 이명현, 「이물교혼담에 나타난 여자요괴의 양상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우리문학연구』 21, 2007.
- 이명현,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천년여우 여우비>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8-3, 문학과 영상학회, 2007.
- 이명현, 「<傳說의 故郷>에 나타난 구미호이야기의 확장과 변주」,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 조수진, 「드라마로 보는 공정사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 드라마 "구미호 여우누이뎐"과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0호,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박전열 역, 『일본의 요괴학 연구』, 민속원, 2009.
- 샘프리니(Andrea Samprini), 이산호·김휘택 역,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도서출판 경진, 2010.
- 지라르(R. Girard), 김진식 역, 『희생양』, 1998.
- Edward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Bill Nichols(ed), 『Movies and Methods II』, Berkeley: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차이와 배제의 공포 -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타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인희 (전남대학교 BK연구교수)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를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많은 괴수와 이인들은 주체가 주변민족을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간의 갈등과 모순으로 이해한 점도 설득력을 가진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에 토론자가 본 논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과 좀 더 구체적인 논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논문 제목이 “차이와 배제의 공포”인데 “차별과 배타의 공포”가 더 적당하지 않은가 한다. 차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배제는 보통 사건이나 상황을 제외하는 것을 지칭하고 배타는 사람을 제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배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한다.

2. 인간과 구미호(요괴)의 관계를 주체(한국인)와 이주민(외국인)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과 요괴의 관계는 선과 악의 관계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주체(한국인)와 타자(이주민)의 관계는 옳고 그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주체와 타자와의 갈등관계를 <구미호 여우누이뎐>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텍스트가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설명하기에 얼마나 유용한 자료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문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필자가 기존의 요괴로서의 구미호의 이미지와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구미호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타자로서의 이민자의 이미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3. “본고에서는 최근 구미호를 재해석한 작품 중 <구미호 여우누이뎐>을 대상으로 인간과 구미호,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공포를 유발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주체가 주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면 타자는 주체의 공포로 귀환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차별과 배타는 곧 복수(공포)의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제시하였는데 결

론이 익히 알려진 일반론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필자는 <구미호 여우누이뎐>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이와 배제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런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주체와 타자의 갈등, 주체와 타자 사이에 태어난 2세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소수자이며 약자인 이들에게 대물림되는 차별과 배타, 차별과 배타로 인해 발생하는 복수와 갈등의 양상은 <구미호 여우누이뎐>과 다문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한다. <구미호 여우누이뎐>과 다문화의 문제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인 결합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5. 윤두수가 연희를 자신의 딸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을 희생제와의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가 단순히 딸의 살리기 위해 희생을 시킨 것이라면 지라르(R. Girard)의 견해를 따르면 희생제와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종의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연희를 죽이는 일과 사회적 정화의례로서의 희생제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희생제와는 고대 신에게 동물이나 인간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한다. 지라르가 말한 마녀사냥의 개념과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6. 타자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비정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동남아나 중국동포와는 상반되게 서양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월감을 표하기도 한다. 따라서 차이가 곧 차별이며 비정상이라는 논리의 도출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7. 필자는 “타자를 주체화하고 다양성을 배제하면 주체와 타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이며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다르게 사유’하는 것만이 외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변화와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대안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민족국가는 항상 민족간의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성의 인정은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혹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학적 결합으로 이상적인 사회모델을 제시하여 성공한 사회가 있다면 그 예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차이와 배제의 공포 - <구미호 여우누이뎐>의 타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함복희 (강원대 강사)

이명현 선생님의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구미호 이야기를 주체와 타자의 다문화 문제로 독해하고자 하신 선생님의 논문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논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여 공부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구미호가 억압된 타자로 재현되었다고 보고, 인간과 구미호 즉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공포를 유발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분석의 틀이나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주체와 타자의 관계와 공포를 유발하는 자질’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성찰과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선생님께서는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를 한국사회의 주체와 타자의 메타포로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이와 배제의 문제’에 도달하려 하셨습니다.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로 다문화 사회의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구미호의 관계가 지니는 메타포가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이와 배제의 문제’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논문에서 어떻게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생각이신지요?

3. 드라마에서 구미호가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인간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혈연을 통해 이어오는 지속적인 차별과 억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사회 다문화 가정도 이와 동일한 문제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그들의 자녀에게 대물림 될 잠재적 가능성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사회에 주어진 임무이고, 이 논문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호에서는 이 대물림의 문제가 비극적으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대물림’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

4.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타자에 대한 문화적 헤게모니는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자를 ‘우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다양하고 무수한 문제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성찰 등이 필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할 때 우리의 인식이 효과적으로 빨리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미호의 메타포는 대중이 쉽게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이와 배제의 문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속의 콘텍스트는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벗어나 현실 속에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호 이야기를 좀더 쉽게 대중과 만나게 한다면 어떤 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재창작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 '이재수의 난'을 중심으로

박재영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연구교수)

I. 들어가기

19세기 조선은 민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봉건지배체제에 항거하는 민란 - 1811년 홍경래의 난, 1862년 임술민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등 - 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이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립국 건설을 꿈꾸었던 1813년 양제해의 모변, 1862년 강제검의 난, 남학교도가 주동이 된 1898년 방성철의 난, 그리고 1901년 '이재수의 난' 등이 대표적인 제주민란이다. 제주민란의 특징은 조선왕조의 지배를 거부하고 별국(別國)을 건설을 내세운 경우, 관리의 탐학과 화전세 과다징수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로 대별되는데, '이재수의 난'은 그 규모가 전례 없이었다는 점, 특히 천주교라는 외래종교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1901년 일어난 '이재수(李在守)의 난'은 정부의 조세수탈,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이에 따른 폐단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대원군 시기까지만 해도 많은 박해를 받았다. 특히, 1866(고종 3)년 대원군 정권에 의해 일어난 병인박해는 당시 6천여 명의 평신도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이 처형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다. 그리고 박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천주교인들의 조선의 전통적인 예절인 조상제사를 거부했다는 점과, 정치적인 파벌, 혹은 서양세력의 진출에 대한 거부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886년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과 1896년 교민조약 이후 천주교는 선교의 자유를 획득한다. 그 대신 천주교는 선교 과정에서 토착민들과의 충돌이 잦았다. 1895년부터 10여년 간 전국에서 300여건의 교안(教案·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중 가장 큰 교안이 190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세칭 '이재수의 난'이다.

지금까지 '이재수의 난'은 '제주민란(濟州民亂)', '신축교난(辛丑教難)', '성교난(聖教亂)', '1901년 (신축)제주항쟁', 또는 '제주교안(濟州教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이재수의 난'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천주교인의 희생을 강조한 천주교 박해사건¹⁾, 조선 말기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한 민란과 다를 바 없는 교난(敎

1) 유흥렬, 「제주도에 있어서의 천주교박해 - 1901년의 교난 - 」, 『이병도박사 화갑기념논총』, 1956; 김옥희, 『제주도신축년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難)2), 제주도민의 단합과 외세에 대한 항거3), 천주교와 상무사와의 대립구도에 의한 도식적인 해석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분석을 통한 일본과의 관련성 검토5) 등 사건의 성격에 대한 해석도 연구자의 시각과 분석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은 어떻게 ‘이재수의 난’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고, 연구자의 시각도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이재수의 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엮은 『신축제주항쟁 자료집 1』6)을 중심으로 제2장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이재수의 난’을 전통사회와 외래종교의 문화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현기영의 역사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와 이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이재수의 난>에 묘사된 이 사건에 대한 감독의 해석을 살펴보고, 끝으로 1901년에 발생했던 ‘이재수의 난’이 오늘날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이재수의 난'에 대한 역사의 기록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던 정부는 막대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관청에서 징수하던 각종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시켜 지방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봉세관을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방 기득권자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중앙 정부와 지방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백성들의 고충은 이중으로 닦쳐왔다.

당시 제주도의 세금은 궁중 살림을 도맡은 내장원이 직접 관장하여 제주 목사도 간여할 수 없었기로 중앙에서 파견된 봉세관은 권세를 남용하였고 백성들에 대한 횡포와 수탈이 극에 다다랐다.7) 제주도에 파견된 봉세관 강봉헌은 어민이 잡아 제

2) 박광성,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원인에 대하여 - 신축 천주교 박해사건 - 」, 『(인천교육대학)논문집』, 제2집, 1967.

3) 정진욱, 「1901년 제주민란에 대한 일고 - 소위 신축교난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제3집, 1983.

4) 이기석, 「1901년 제주민란의 성격과 구조」, 『종교 인간 사회』(서의필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8.

5) 김양식은 제주민란에 대한 이전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민란 관련 인물들의 보고서, 공초, 소장 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일본순사의 현지보고서와 그 별지 부속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의 한계성을 보완하였다. 김양식, 「1901년 제주민란의 재검토」, 『제주도연구』제6집, 1989.

6) 이 자료집은 ‘이재수의 난’과 관련된 『평리원 판결문』, 김윤식의 『續陰晴史』, 『李在護 제주목사 보고서』, 『삼군교폐사실성책(三郡敎弊查實成冊)』,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教民物故成冊)』 영인본과 번역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엮음, 『신축제주항쟁 자료집 1』, 도서출판 각, 2003.

7) 金允植, 『續陰晴史』, 1901년(광무 5년) 4월 12일 기록.

밥상에 올리는 고기나 전복에까지 어세를 물리고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수세(樹稅)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⁸⁾ 그리고 문제는 강봉헌의 제주도민에 대한 세금 수탈에 일부 천주교도들이 편승한 점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신부는 왕이 직접 내린 '여아대(如我待 - 국왕처럼 대우하라)'라는 신표를 지니고 있었고, 이에 제주 아전들이 천주교에 들어 보신하는 풍조까지 있었다. 아울러 제주에 유배당한 죄인들이 천주교에 들어가 신앙과는 아랑곳없는 분풀이를 일삼았으니 민원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프랑스 신부들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도 천주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신부들과 비슷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일부 주민들이 천주교에 입신한 신앙 외적 동기를 보면 '약과 설탕을 얻을 수 있다', '관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죄를 짓더라도 성당에 들어가면 못 잡아 간다' 등 등 신앙과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전답과 전곡을 수탈하는가 하면 지방관의 행정에까지 간섭하였고 인명을 살상하고서 성당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다.⁹⁾ 따라서 이 사이비 교도들의 월권행위가 주민들과의 갈등을 심화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제주도에 처음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98년이었지만 3년 후인 1901년에는 영세자 242명, 600여 명의 예비신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교세확장을 이루었다.¹¹⁾ 입교의 동기는 대부분 순수한 신앙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는 프랑스 신부를 배경으로 그 특권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제주도민의 반천주교 의식을 더 한층 자극한 것은 기존의 유교적 가치체계와 제주도의 토착신앙을 부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부 천주교인들은 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의지해온 당산목이나 신당을 파괴하고 다니는가 하면¹²⁾, 성당 분소마다 형틀을 마련, 동조하지 않으면 잡아다 고문을 가하기까지 했다. 천주교에 입교한 교인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채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사형(私刑)까지 마음대로 시행하였다.¹³⁾ 천주교를 반대한다 하여 사이비 교도 오달현 등 다수가 유생 현유순의

8) 강봉헌이 조세수취를 위해 조사한 내용은 『濟州·大靜·旌義郡各公土調査成冊』, 『濟州牧三郡各浦漁基漁網稅及口文成冊』, 『濟州牧三郡各公知松木雜木調査成策』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강봉헌의 세원조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종의 公土稅가 14,888냥, 각종 浦稅가 7,355냥, 木價가 2,134냥 정도였다. 김양식, 앞의 논문, p.132 재인용.

9) 『황성신문』, 1899년(광무 3년) 9월 30일, 10월 13일; 1903년(광무 7년) 2월 12일, 6월 30일 기사 참조.

10) 이 같은 천주교인과 비교교인의 갈등과 대립은 교안(敎案)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원순, 「조선말기사회의 대서교문제 연구 - 교안을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 15, 1973 참조.

11) 천주교가 제주도에 처음 전래된 것은 1898년 4월 중문면(中文面) 색달리(穢達里) 출신 양 베드로가 신(申) 아오스당의 가족과 강(姜) 도비아에게 선교를 하면서부터라고 전해진다. 이들은 당시 서울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뮌헨 주교에게 간청하여 배(裨) 신부와 김(金) 아오스당(元永) 신부가 제주도에 파견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1900년 구 마술(라크루스)과 문제만(제마노 못세) 등 2인의 프랑스 신부가 입도하였다. 이들은 전교에 힘써 제주에 본당, 정의현 하논에 흥로교회를 두고 중요 촌락에는 공소를 두어 교세를 확장하였다.

12) 그 당시 제주도 마을 아낙네들이 수백 년 동안 섬겨 받들어 온 神木이 있었다. 이 신목은 팽나무였는데, 그 우거진 팽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백 년 조용히 좌정해 오던 할망당은 마을마다 모시지 않은 곳이 없었다. 천주교 신부들이나 교우들이 토산당 신목, 할망당 神位, 神主 그리고 여드렛당이 모시는 뽕신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에서 볼 때 이것들은 우상이며 미신이며 잡귀·잡신이였다.

집을 습격, 세간을 부수고 현유순을 성당으로 끌고 가 상비해둔 형구로 고문을 하다 치사케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¹⁴⁾ 제주 관가에서 나와 치사를 확인하고 검시까지 했으나 살인범을 구금하기는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때 검시관이 대정현감인 채구석이었고 그 검시를 위해 하수인으로 수행한 것이 대정현의 관노이던 25세 청년 이재수였다.¹⁵⁾

〈표 1〉 1901년 '이재수의 난' 당시 지역별 교폐(敎弊)의 유형

	경제적문제						토속 신앙 배격	입교 강요	간통	山訟	私刑	기타	합계
	토지 · 조 세수 탕	어장 수탈	부채 不報	매매 상 폐단	금전 탈취	기타							
정의군	36	3	17	29	28	5	31	11	7	4	13	4	178
대정군	21		5		7		4	7		2	1	1	48

* 출처: 『旌義郡敎弊成冊』, 『大靜郡敎弊成冊』

따라서 제주도의 통치권을 위협받는 관리들, 향촌 사회에서 기득권을 빼앗긴 향임층, 농어업 기반을 위축당한 민중 등 모든 면에서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천주교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연이은 천주교인들의 교폐에 대해 자구의 움직임이 싹틀 수밖에 없었고 대정군의 향장(좌수)인 오대현 등이 주동해 상무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상무사는 천주교의 교폐에 대한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상무사를 중심으로 천주교의 교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민회가 열렸다. 민회에서는 봉세관의 세폐(稅弊)와 천주교인들의 교폐(敎弊)를 성토함은 물론 제주성으로 가서 이들 폐해를 시정해 줄 것을 제주목사와 봉세관에게 등소(等訴)하기로 결의 하였다. 등소란 백성 여럿이 연대서명하여 요로에 호소하는 민원통달 방식이다. 그 일행 가운데는 이재수도 끼어있었다. 민회에서는 오대현과 강우백을 장두(狀頭)로 삼아 두 길로 나누어 제주성의 서쪽과 동쪽 방향으로 향하였고, 이들에 합세하는 제주도민들이 다투어 모여 들었다. 여기까지 민회는 어디까지나 집단적인 등소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온건적이고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13) 『황성신문』, 1901년(광무 5년) 5월 2일 기사 참조.

14) "지난 달 정의교당에서 전 훈장 현유순을 잡아가두고 또 오성인 사람(주: 오성락)이 잡혀갔다가 죽었는데, 때려죽였다고도 하고 혹은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도 한다." 金允植, 『續陰晴史』, 1901년(광무 5년) 2월 22일.

15) 1901년 제주항쟁을 이끌었던 장두 이재수에 대해서는 그의 출신이 미천하고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재수의 누이동생 이순옥이 남긴 『야월(夜月)한라산』에 의하면, 이재수는 1877년 제주 대정군 인성리에서 부친 이시준(李時俊)과 모친 송씨(宋氏)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거사 당시에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그는 5척 미만의 작은 키에 노란 빛이 감도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정의감과 의협심이 투철하고, 행동이 매우 민첩해 제주와 대정 사이를 밤중에 다녀갈 정도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여 대정 군청의 관노(통인) 노릇을 하던 중 1901년 민군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민중의 위세에 지레 겁을 먹은 천주교 측은 회민(會民)을 폭도로 규정하고 각지의 교인 천여 명을 소집하여 총기 등으로 무장하였다. 천주교 측은 이번 사건의 해결책으로 폭도의 우두머리를 잡아 기선을 제압하면 이전의 농민봉기처럼 우두머리를 잃은 회민은 해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5월 14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에 있는 민회를 급습하여 장두 오대현 등 6명을 납치하였다. 더 나아가 민회 세력의 본거지인 대정현으로 쳐들어가 몇 사람을 쏘아 죽이고 무기고를 열어 중무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오히려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등소를 통한 온건노선에서 무장투쟁에 의거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는 국면을 초래하였다. 민회 조직은 새롭게 전투적인 체제로 정비되었고, 납치된 장두 오대현을 대신하여 이재수가 새롭게 장두로 등장하였다. 민회의 성격이 민군(民軍)으로 바뀐 것이다. 이재수는 대정으로 돌아와 사발통문을 돌려 주성에 감금된 장두 오대현과 동지들을 구출하고, 제주 목사에게 봉세관과 천주교도의 월권을 다스려줄 것을 호소하자고 했다.¹⁶⁾ 이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였고, 민군은 서진 장두 이재수와 동진 장두 강우백의 지도하에 동서 두 패로 갈라 제주 섬을 한 바퀴 돌며 장정을 모아 제주성에서 합류키로 했다. 드디어 5월 17일, 민군은 제주성 밖의 황사평에 집결하여 제주성에 들어간 천주교도들과 공방전에 들어갔다. 천주교도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무기고의 무기를 꺼내 성문을 닫고 대치했으며 주민들도 포수들을 앞세워 총격전을 벌여 사상자가 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민군은 제주성에 대한 철저한 포위작전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성 밖의 교인들을 색출하여 처형하기 시작했다. 성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었지만 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내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해갔다. 천주교도들 때문에 민군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고, 무엇보다 바닥난 식량사정이 성내 주민들의 마음을 민군 측으로 돌려놓았다. 드디어 5월 28일 성문 폐쇄로 식량이 떨어지고 생업이 중단되자 성안 부녀자들이 봉기하여 성문 빗장을 열었다. 여기에 앞장섰던 이들은 무녀(巫女)와 퇴기(退妓)들로, 그들은 그동안 천주교도들에게 미신이니 부도덕이니 해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입성한 민군은 이재수의 주도하에 성안의 천주교인을 색출하여 317명을 처형하였다.¹⁷⁾ 이때 천주경이나 십계명을 외우며 어느 누구도 원

16) 신축년(辛丑年) 3월, 사발통문을 돌려 장정들을 모았던 이재수의 격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대의를 펴며 영웅 호걸을 사귀지 아니할 자 누구이며, 대적(大敵)을 토벌할 제 의병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성공치 못할지라. 영웅열사여, 또 이 사선에서 해매는 제주 도민이며, 우리 생활의 토대인 제주도는 나날이 궁핍의 길로 달음질쳐 간다. 다 같이 일어날지이다. 제주 도민들아, 저 무도한 폭도들을 토벌할지이다.” 오성찬, 『성교난(聖敎亂)의 주동자 이재수』, 『나라사랑』 제79집, 1991, p.36 재인용.

17) 지난 2003년 11월,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김영훈, 김창선)는 당시 사망자 317명의 명단이 기록된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이라는 귀중한 자료를 발굴했다.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은 제주목에서 근대법원인 '평리원'(서울에 있던 법원)의 안종덕 검사에게 보고한 사망자 명단을 적은 문서다. 이번에 발굴된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총 317명으로 교인 309명, 평민이 8명, 남자 305명, 여자 12명으로 나타났다. 또 삼군의 물고자(사망자) 현황으로 불 때 제주군(36개 리) 93명, 대정군(26개 리) 81명, 정의군(8개 리) 142명이다. 1901년 '신축항쟁' 또는 1901년 제주항쟁으로 알려진 일명 '이재수의 난'은 당시 민군과 교회 측 사이에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된 사건으로 그 결과 민군과 교민

망하지 않고 죽어간 진실한 교도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미 5월 20일 프랑스 신부는 유배죄인인 장윤선을 목포로 보내 프랑스 군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민군이 제주성에 들어간 후인 5월 31일 270명의 프랑스 해군과 새로 부임하는 목사 李在護, 그리고 제주도민의 원성을 받고 있던 신임 대정군수 강봉헌 등을 태운 군함 두 척이 제주도에 입항하였다. 또한 6월 2일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파견한 강화도 진위대 병력 100명과 궁내부 고문관인 미국인 샌즈(W. F. Sands)가 급파되었고, 일본 군함까지 출동함에 따라 사태는 국지적 문제에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프랑스 함대 제독은 전 대정군수 채구석과 민군 장두들을 포박하여 엄중히 처분하도록 위협하였다. 새로 부임한 제주 목사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선 해산, 후 민폐해결이라는 조건으로 민군과 협상하면서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민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운동목표였던 세폐와 교폐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장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이상 무조건 해산을 할 수 없었기에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볼 수 없었다. 특히, 봉세관 강봉헌이 다시 대정군수로 부임한 일은 제주도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처사였다.

중앙 정부는 민군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6월 10일 찰리사(察理使) 황기연(黃耆淵)과 200명의 진위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민란 수습을 책임진 찰리사가 제주성에 들었을 때만 해도 동서 민군 1만 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관군은 민군 지도부에게 일단 제주성내로 들어오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6월 11일 봉세관 강봉헌과 세폐·교폐가 심했던 자들, 그리고 천주교 측으로부터 폭도의 두목으로 오인받은 채구석을 체포하였다. 이에 민군 역시 제주성내로 들어갔고, 관군은 장두들을 즉시 구속한 뒤 민군을 강제 해산시켰다. 그리고 7월 18일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세 장두가 40여 명의 관련자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는 것으로 이 항쟁은 중앙 정부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이 항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6월 17일 찰리사는 세폐 혁파에 관한 17조항을 전령(傳令)하였으며, 제주 목사, 3군수, 프랑스 신부와 더불어 교폐 방지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12조로 된 <敎民和議約定>을 체결하였다.

7월 18일 서울로 압송된 제주항쟁 관련자들은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대한제국의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은 10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고, 다른 관련자들은 징역, 곤장, 무죄로 석방되었다. 아울러 프랑스 공사관의 프랑스 신부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피살 교인에 대한 구휼금 지불요청은 1903년 말에 타결되어, 1904년 6월에 이를 도민 부담으로 배상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¹⁸⁾

쌍반 간에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체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서 대략 500-700백명 정도, 제주에 유배와 있던 김윤식의 '속음청사'에는 500-600 명으로 기록돼 있다. 「1901년 '이재수의 난' 당시 사망자 명단 발굴」, 『오마이뉴스』, 2003.11.08.

III. 소설과 영화로 재구성된 역사

위에서 필자는 '이재수의 난'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픽션(faction: fact + fiction -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문화예술 장르)으로서의 역사가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역사소설과 영화로 재탄생한 '이재수의 난'은 어떤 모습은 하고 있을까? 111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란이 21세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현기영의 역사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를 살펴보자. 현기영은 제주도의 역사적 사건을 작품소재로 삼아 문학을 통해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민족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¹⁹⁾ 그의 장편 역사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는 월간잡지 《마당》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1983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소설은 구한말 제주의 봉건적 지배질서와 천주교가 상징하는 외세에 맞섰던 이재수의 난(1901)을 다루고 있다. 현기영은 자신의 작품 서두에서 이재수의 난 당시 제주도에 귀양온 김윤식(金允植)의 일기 《속음청사(續陰晴史)》를 기본 사료로 하고 천주교 측이 공개한 신부와 주교의 서한문, 황성신문, 그리고 민간에서 취재한 제주 촌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문학적 상상력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거납(拒納)운동으로 시작된 민란이 어째서 반봉건적 의거(義擧)·천주교 박해(迫害)로 발전되었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성격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혹자는 이 소설이 '서구 외래종교인들의 편견 또는 관변 기록들의 왜곡에서 벗어나 이 땅의 토착적인 민중의 입장에서 반봉건·반외세 성격을 가진 이재수의 난을 생생하게 재구성하여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한결 새롭게 해 주고 있다'고 평했지만, 필자는 소설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 주고 있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필자가 문학에 대해서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은 "상상력을 절제하여 복원작업에 더 열중한 이 작품은 아마 문학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작가의 변처럼, 민란의 성격을 충실하게 형상화 하려고만 했지 '이재수의 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과거사실의 충실한 복원을 위해서라면 소설을 쓰기보다는 역사를 써야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재수의 난'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작가는 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18) 피살 교인의 장지문제는 1903년 말에 타결되어 역설적이게도 제주도 황사평으로 장지가 결정되었다. 황사평은 제주성 안의 천주교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민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였는데, 민란 이후 거구로 천주교인들의 안식처가 된 것이다.

19) 작가 현기영은 1941년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고 제5회 신동엽 창작기금과 제5회 만해 문학상, 제2회 오영수 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으로 "순이삼촌", "아스팔트", "마지막 테우리", 장편으로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타는 섬" 외에 수필집 "젊은 대지를 위해서"가 있다. 20년의 교직생활에서 떠나 현재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음.

그리고 잠시 작가가 소설의 서두인 '책 머리에' 언급한 소설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나는 이 소설에서 문학성의 추구보다는 두 민란의 진정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쏟았다. 민란은 결코 평지들출형이 아니다. 화산의 분출은 그것의 지질학적 까닭이 있고, 종기가 끓아터짐은 그것의 병리학적 연유가 있게 마련이다. 민란이 있게 한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병리현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국사의 문맥에서 파악해 보려는 것이 이 소설이 지닌 최대의 의의일 것이다.²⁰⁾

위 인용문에서 '국사'의 문맥에서 파악해 보려했다는 작가의 변에 필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지방사'의 문맥이 아닌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국사'의 문맥에서 파악한다?²¹⁾ 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수의 난은 실패한 반봉건·반외세 민족항쟁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오히려 '국사'를 통해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지방사'를 발굴해 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러한 시각이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맞물려 이 소설이 가진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설을 쓰든지 역사를 기록하든지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기영의 역사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는 1999년 영화감독 박광수(朴光洙)²²⁾에 의해 <이재수의 난>으로 영화화되었다. <이재수의 난>은 개봉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35억원), 이정재 심은하 등 초호화 캐스팅, 첫 한-불(한-불) 합작 영화인 데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 지원작으로 선정될 만큼 일찌감치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²³⁾ 그리고 스위스에서 열린 제52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본선 경쟁부문에 진출, 청년심사위원상 부문 2등상을 받았다.

오늘날 제주는 뛰어난 자연풍광을 가진 관광지이자 신혼부부들이 허니문을 즐기는 신혼여행지이지만, 역사적으로 제주는 피안의 이상향은 아니었다.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변방이며, 주류에서 밀려난 이들의 귀양지로 알려진 '까마귀 섬' 제주는 해일처럼 밀려드는 외세의 격랑 속에 있었고 민란도 끊이지 않았다. 영화

20)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비평사, 1983, p.4.

21) '국사'의 탄생은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성립과 시기가 일치하며, 근대국가에서 '국사'는 국민들에게 민족 정체성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사'는 여성, 지방민,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프로네시스, 2006, p.147.

22) 박광수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1988년 데뷔작 「칠수와 만수」, 「그들도 우리처럼」(1990년), 「베를린 리포트」(1991년), 「그섬에 가고 싶다」(1993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년) 등을 들 수 있다.

23)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 문광위의 이협 위원장, 길승흠, 신기남 의원, 우근민 제주지사 등이 박광수 감독 연출로 현재 제주도에서 촬영 중인 영화 <이재수의 난>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신장관 등이 출연하는 장면은 두령을 선출하는 유럽회의 장면으로 30초 정도. 이협 위원장과 길승흠, 신기남 의원은 모두 갓을 쓰고 유럽으로 출연하였다. 신장관 등은 "스크린쿼터 문제로 의기소침해진 국내 영화인들을 돕고, 정치인들의 방화 사랑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전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비록 엑스트라(유생 역)로 출연하였지만, 100년 전의 제주민란을 소재로 한 영화 <이재수의 난>을 제주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1999.01.26; 1999. 3.10.

소재가 된 ‘이재수의 난’은 1901년 대정군 인성리에서 일어난 군민과 천주교도 충돌 사건으로 시작된다. 외세에 맞선 민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고종의 칙서를 앞세운 천주교도들의 교폐와 이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이 비극적 서사의 골격을 이룬다. 1901년, 열강 각축장이 된 조선, 프랑스 신부들이 교세를 확장하면서 일부 질 나쁜 교인들이 관권을 넘는 횡포를 부린다. 조정에서 내려보낸 봉세관도 고혈을 빨면서 백성은 「교폐」와 「세폐」, 이중고에 시달린다. 보다 못한 유생들이 제주민을 모아 쫓기하면서 민란으로 번진다. 제주 서남쪽 대정군 군수 채구석(명계남)의 통인(심부름꾼) 이재수(이정재)도 난에 동참했다가 장두가 된다. 난이 끝나면 목을 내놓을 운명임을 알면서 자칭한 지도자 역이다. 프랑스 전함이 제주도로 진격하는 가운데, 이재수는 교인들이 장악한 제주성 함락에 나선다. ‘이재수의 난’은 천주교도들과 제주도 민중 사이의 충돌이 충돌 든 전쟁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프랑스와의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다.

그리고 제주민란(民亂)과 신축교난(敎難)이라는 용어가 함께 불리는 이유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학정과 천주교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봉기였다는 시각과 수백 명의 천주교도가 피살됨으로써 교회가 수난(박해)을 입었다는 평행한 시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광수 감독은 어떠한 시각에서 ‘이재수의 난’을 바라보고 있을까가 궁금해진다. 감독은 ‘이재수의 난’을 3개의 시선으로 이끌어간다.²⁴⁾ 제주 민초를 상징하는 이재수, 좌절한 개화기 지식인 채구석 군수, 그리고 영화 내내 역사 현장을 맴도는 까마귀가 그것이다. 까마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다. 박광수 감독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서 감정 개입을 자제한다. 이렇게 영화에서 제3화자의 배치는 사건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루려는,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하겠다는 감독의 의지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시선들은 오히려 110분짜리 영화에서 이야기의 균형 있는 전개에 상당한 무리를 수반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영화에서 민란의 주체인 제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일관된 역사의식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폭도인지 민중의 영웅인지 불분명한 이재수, 시대를 고민하는 지식인이라기 보다는 민군과 천주교 양쪽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기회주의적인 인물에 가까운 채구석, 그리고 제3화자인 까마귀 역시 감독의 시선인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시선인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역사가의 시선인지 불분명하다.

IV. 나가기

이상에서 필자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한국사의 전환점에서 역사적 사

24) 박찬식, 「〈이재수의 난〉: 사실성과 상징성 사이의 표류」, 『역사비평』통권 48호, 1999, p.384.

건으로서의 ‘이재수의 난’의 내용과 오늘날 역사소설과 영화로 재현된 ‘이재수의 난’에 대한 작가와 감독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당시 주변 열강에 의해 국가의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국제 정세하에 대한제국의 남단 제주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가혹한 조세수탈,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그에 따른 폐단 등이 원인이 되어 ‘이재수의 난’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주민중운동사에서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점하고 있다. 천주교 세력은 지방 관료들에게 있어서 통치권 행사의 방해자로 인식되었으며, 일반 민중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침탈적 특권세력으로, 전통적 의례나 토착종교 신봉자에게는 문화적·종교적 침략자로 규정되어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재수의 난’에서 천주교인들이 수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교폐에 대한 양갓음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천주교 측의 입장이 전혀 잘못 된 것은 아니다. 반면, 누적된 봉건적 수탈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제주민의 입장에서는 항쟁의 결과 17개 항의 세폐혁과 약속을 받아낸 성공적인 반봉건운동이었다. 또한 천주교 세력을 침략적 외세로 간주하여 무력항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반외세운동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²⁵⁾ 아울러 교폐척결의 내용을 담은 12개 항의 <교민화의약정(敎民和議約定)>을 받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²⁶⁾

그러나 이 사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해석되었다. 천주교측은 이 사건을 신축교난 혹은 신축교안이라 불렀고²⁷⁾, 주민들은 언제부턴가 ‘이재수의 난’으로 부르고 있다.²⁸⁾ 천주교 측은 ‘이재수의 난’ 당시 살해당했던 교인들을 황사

25) 도민들이 천주교인을 “범국놈, 범국년”이라고 부른 점이나, 이재수가 1901년 5월 29일 제주성에 입성하고 “서양 사람을 쳐 없애서 주성을 회복하였으니 그 공이 막대하다”고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續陰晴史>, 1901년(광무 5년) 5월 29일 기록.

26) 이영권, 『제주 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pp.282-283.

27) 아래 인용한 기독교신문 기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봉세관의 제주도민에 대한 각종 세금을 징수에 천주교인 최형순(崔亨淳)이 실무를 맡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세폐(稅弊) 시정을 요구하는 제주민들의 요구가 교폐에 대한 응징의 차원으로 발전한 이유가 민회를 습격하고 주민을 살상하는 등 천주교도들의 과잉대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 내지는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제주 본토민과 천주교도 사이의 유혈충돌에 대해서는 ‘세칭 제주도 신축교난(辛丑敎難)’이라고 보는 시각과 ‘신축교란(辛丑敎亂)’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1901년 제주도에서 본토민과 천주교도 사이에 일어난 충돌사건을 세칭 ‘제주도 신축교난(濟州道 辛丑敎難)’이라고 한다. 토착신앙이 강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외래종교인 천주교에 대한 강력한 반감과 제주도 경제권을 둘러싼 토호(土豪)세력과 중앙에서 파송한 봉세관(捧稅官)과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일본인들이 토착민들을 앞세워 천주교인과 프랑스 세력을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연결된 복잡한 배경을 지녔다. 1901년 1월 제주 목사 이상규(李庠圭)가 탐관오리로 지목, 면직 되고 봉세관 강봉헌(姜鳳憲)이 부임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그 수하에 제주읍 성당 목사 최형순(崔亨淳)이 실무를 맡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제주도 출신 대정군수 채구석(蔡龜錫)이 토착세력을 규합, 중앙파송 봉세관과 천주교인들을 공격하였다. 결국 천주교인 300여명이 학살되는 등 상호에 많은 사상자를 내는 유혈사태로 변질다. 프랑스 외교관들은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당시 제주 거주 라쿠르츠(M. Lacrouts) 못세 신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프랑스 함대가 제주 해안에 출동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토착민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지방관을 교체하고, 제주에 유배되었던 유배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토착민에 대한 민심수습, 천주교인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활동 등으로 사태를 진정시켰다. 사건은 동족간의 살육으로 끝나고 말았다.” 『기독교신문』, 2009.02.24.

28) 이규태, 「역사 에세이 100년의 뒤안길에서: (6) 제주 성교 이야기」, 『조선일보』, 1999.04.09. <신축제주항쟁>의 주모자 이재수의 누이동생 이순옥은 이재수가 서울에 붙들려가 처형되자 대역죄인의 피블

평에 매장하여 지금까지도 순교자로 추앙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은 이재수가 태어나고 자란 대정읍 보성리 홍살문 거리에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3명의 장두의 뜻을 기려 <제주대정군삼의사비(濟州大靜郡三義士碑)>²⁹⁾ 를 건립하였다.

제주도에서 ‘이재수의 난’은 더 이상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지 않는다. “난(亂)”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불순한 반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수의 난’은 이제 ‘1901년 제주항쟁’ 또는 ‘신축 제주항쟁’으로 불리고 있다. 기념사업회도 조직되어 있어 1901년 제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이 항쟁의 진원지인 대정지역에서 열린다. 제주도에는 이미 ‘국사’의 시대는 가고 ‘지방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끝으로, ‘이재수의 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된 문제라고 생각된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원군 정권에 의한 천주교 박해가 막을 내린지 어언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어쩌서 중앙정부가 아닌 민중에 의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근대화 담론을 뛰어 넘어 새로운 세계체제에 편입되고 있다.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문화정체성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립은 문화충돌 내지 문화전쟁을

이인지라 밥을 주면 후환이 있을까 싶어 내쫓거나 달래 보내는 바람에 무척 굶기도 했다. 그는 오빠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작심하고 직접 보고 들은 성교란 이야기를 꼬박꼬박 글로 적어 모았다. 그리고 15세 되던 해 현해탄을 건너갔다. 그녀는 당시 소문난 작가들을 찾아다니며 책자로 내고자 도움을 청했는데, 그 정성에 감동한 작가 12명이 추렴하여 낸 책자가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성교란의 건문을 모은 『야월 한라산』이다.

- 29) ‘이재수의 난’을 주도한 세 명의 장두를 기리는 <濟州大靜郡三義士碑>는 1961년 대정 지역의 유지들과 이재수의 후손들이 60년 전의 의로운 항거를 기념하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살문 거리에 세웠다. 현재 그 비석은 홍살문 거리 주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홍살문 거리 남쪽으로 약 15m 가서 다시 동쪽으로 난 좁은 골목길 드랫물 자리로 옮겨졌다. 이 비석은 1997년 새로 만들어 세운 비석 곁에 묻혀 있어 사진으로만 확인될 뿐이고 지금은 콘크리트 기단만 남아 있다. 현재 새로 세운 비석에는 이전에 있었던 “제주의 무뢰배들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그 위세를 믿고 탐학을 마음대로 하고 부녀를 겁간하여.....”등의 표현은 빠져 있다.(이영권, 앞의 책, pp.218-220) 1997년 새로 세운 비석의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무릇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식이 될 것이다. 1899년 제주에 포교를 시작한 천주교는 당시 국제적 세력이 우세했던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그 때까지 민간신앙에 의지해 살아왔던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데다 봉세관과 심지어 무뢰배들까지 합세하여 그 폐단이 심하였다. 당의 신목을 베어내고 제사를 금했으며 심지어 사형(私刑)을 멋대로 하여 성소 경내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에 대정 고을을 중심으로 일어난 도민 세력인 상무회는 이 같은 상황을 진정하기 위하여 성내(城內)로 가던 중 지금의 한림읍인 명월진에서 주장인 오대현이 천주교 측에 체포됨으로 그 뜻마저 좌절되고 만다. 이에 분기한 이재수 강우백 등은 2진으로 나누어 섬을 돌며 민병을 규합하고 교도들을 붙잡으니 민란으로 치닫게 된 경위가 이러했다. 규합한 민병 수천 명이 제주시 외곽 황사평에 집결하여 수차례 접전 끝에 제주성을 함락하니 1901년 5월 28일의 일이었다. 이미 입은 피해와 억울함으로 분노한 민병들은 관덕정 마당에서 천주교도 수백 명을 살상하니 무리한 포교가 빚은 큰 비극이었다. 천주교 측의 제보로 프랑스의 함대가 출동하였으며 조선 조정에서도 찰리이사(察理御使) 황기연(黃耆淵)이 이끄는 군대가 진입해와 난은 진압되었고 세 장두는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재판 과정을 거친 후에 처형되었다. 장두들은 끝까지 의연하여 제주 남아의 기개를 보였으며, 그들의 시신은 서울 청파동 만리재에 묻었다고 전해 오나 거두지 못하였다. 대정은 본시 의기 남아의 고장으로 조선 후기 이곳은 민중 봉기의 진원지가 되어왔는데, 1801년 황서영의 백서사건으로 그의 아내 정난주가 유배되어 온 후 딱 100년 만에 일어난 이재수난은 후세에 암시하는 바가 자못 크다. 1961년 신축(辛丑)에 향민들이 정성을 모아 『제주 대정군 삼의사비』를 대정고을 홍살문 거리에 세웠던 것이 도로 확장 등 사정으로 옮겨 다니며 마모되고 초라하여 이제 여기 대정고을 청년들이 새 단장으로 비를 세워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

치를지도 모르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진단도 있다.³⁰⁾ 우리가 ‘1901년 제주항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중앙정부의 지방관의 기혹한 세금수탈과 학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교인이 된 뒤, 천주교의 위세를 등에 업고 어제까지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폐를 부리던 양상이다.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현상을 빗대어 ‘GNP 다문화’라고 하는데, 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웃에게 교폐를 부리던 교인은 아닌가’ 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삼아보고자 한다.

30) 박찬식, 앞의 논문, p.388.